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이우태·박재적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연구책임자: 정구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우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KINU 연구총서 17-14

---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정구연, 이우태, 박재적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소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SBN	978-89-8479-903-5 93340 동맹 국가 협력[同盟國家協力], 국제 외교 분석[國際外交分析] 349.9-KDC6 / 327.17-DDC23 CIP2018003615
가격	7,000원

---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요약 .....	8
<b>I. 서론 .....</b>	<b>13</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2. 연구의 설계 .....	17
<b>II. 탈냉전기 미국 동맹체제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등장   정구연 .....</b>	<b>19</b>
1. 탈냉전기 전략환경과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	21
2. 동맹의 복원력과 유효성 .....	32
<b>III. 미일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이우태 .....</b>	<b>43</b>
1. 미일동맹의 전개 .....	45
2. 미일동맹의 진화와 일본 안보이익의 진화 .....	55
3. 일본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일본 내부 동학 .....	63
4.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과 전망 .....	73
5. 소결 .....	80
<b>IV. 미호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박재적 .....</b>	<b>81</b>
1. 미호동맹의 전개 .....	83
2. 미호동맹의 진화와 안보이익의 변화 .....	86
3.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호주 내부 동학 .....	92
4.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과 전망 .....	99
5. 소결 .....	112

<b>V. 결론: 한미동맹으로의 함의   정구연</b> .....	<b>115</b>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	117
2. 한미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망 .....	120
<b>참고문헌</b> .....	<b>123</b>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b>131</b>

## 표 차례

표 II-1	미국 국가 이익구조의 위계 .....	25
표 II-2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영역수행 선호도(2014) .....	27
표 III-1	일본·중국 국내총생산(GDP) 및 국방비 비교 .....	58
표 III-2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2015 신가이드라인)의 내용 .....	74
표 III-3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변천사 .....	76

# 그림 차례

그림 II-1 갈등의 연속성 .....	23
그림 II-2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결정요인 분석: 연구설계 .....	41
그림 IV-1 말라카, 순다, 롬복 해협 .....	88
그림 IV-2 다윈, 퍼스, 코코스 아일랜드 .....	102

## 요 약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여타 미국 동맹체제와 마찬가지로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점에서 있다. 미국의 위협중심 군사전략에서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역량결집을 통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부담공유이며, 동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제고이다.

본 연구가 수행한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진화과정은 이와 관련해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미일동맹의 사례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갖는 전략적 이익, 즉 일본의 역내 역할 증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과 보다 넓게는 아태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국내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호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호동맹 역시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호동맹의 글로벌화가 가능했던 주요 변수는 구조적인 것으로, 역내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안보위협과 호주가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법치 등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이다.

이상의 사례연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맹국이 갖고 있는 지역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동맹국이 처한 지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특히 두 번째로,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정치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국군이 역내

## 요 약

안보임무수행의 영역을 벗어나 역외 임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 역시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해당 동맹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할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역할 분담과 자원 공유의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안보부담공유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견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비대칭동맹에서 좀 더 동등한 파트너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주제어:** 글로벌 파트너십, 안보부담공유, 상호운용성, 미호동맹, 미일동맹

## Abstract

### **Evolving Alliance and Forging The Global Partnership**

Kuyoun Chung

The US-ROK alliance stands at a crossroads of transition from an alliance to protect the Korean peninsula to that of responding various global security threats in multiple theaters. Amid strategic transformation from a threat-based to capability-based alliance strategy, the US and alliances' global partnership intends to maintain readiness to respond to various global threats by pooling their capabilities. In this process, burden-sharing and enhancing interoperability remain a controversial issues that need to be coordinated between the allies.

To explore the condition under which global partnership has been successful, this research undertook the comparative case studies between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Australia alliance systems and how they managed the process of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 The case of the US-Japan alliance system demonstrates that paralleled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the ruling of conservative Liberal Democratic Party provides a permissive condition under which global partnership can thrive between two allies. Similarly, the case of the US-Australia alliance shows that the

## Abstract

common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wo allies lies at responding to a rise of China, and developing the global partnership in an attempt to respond to China's threat to liberal internationalist order, sustain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se case studies raise several questions for the US-ROK alliance in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 The first question is about the regional strategy of the ally and how it can be compatible with the global partnership and how much resources it can provide to that end.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how the US-ROK alliance is perceived domestically. It evidences how far such endeavor for global partnership can be sustained regardless of leadership change in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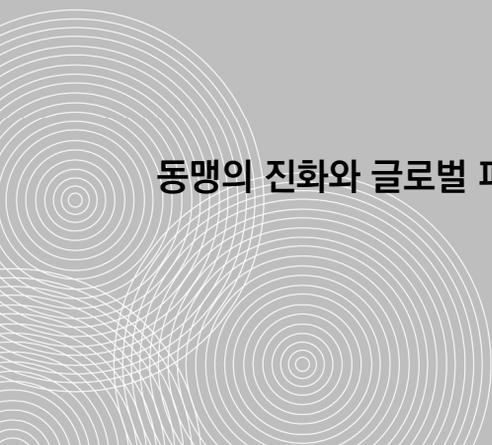
Third, burden-sharing is likely to be requested from the United States, not to mention of the case for the global partnership. It is thus necessary to design the burden sharing process and purposes to enhance South Korea's global status as a middle power and to correct the asymmetry inherent in the US-ROK alliance.

**Keywords:** global partnership, burden-sharing, interoperability, US-Australia alliance, US-Japan alliance.



# I. 서론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동맹의 진화 형태로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4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A Global Partnership (April 25, 2014)』 제하의 회담결과 보고서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글로벌 파트너십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제고(deepening)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한반도 방위공약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비확산, 해적 퇴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안보현안에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러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2000년 「한미동맹 공동비전」, 2010년 「한미국방협력지침」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비전을 공유해왔으며, 2014년 한미 정상회담으로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협력의 영역을 논의해왔다. 2015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협력의 뉴프런티어’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했으며, 협력의 영역으로 제기된 현안은 사이버안보, 우주,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여타 동맹협력과는 그 진화의 속도에 있어서나 협력의 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 역시 기존의 동맹공약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단순히 비전통안보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도모하는 정책, 혹은 냉전기 동맹협력이 이루어지던 지역 이외에서의 협력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통안보 혹은 비전통안보의 영역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실상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영역을 분리한다는 것이 어려

위질 정도로 최근의 전략 환경은 복합갈등(hybrid conflict)의 양상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식하는 전략 환경은 그러한 두 가지 형태의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동맹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는 궁극적으로 위협중심 군사전략으로부터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인식적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차원의 협력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제고와 안보부담공유(burden sharing)를 통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안보현안들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협력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량과 위협인식, 그리고 참여의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협력의 영역을 제시하고, 동맹국 역시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최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그리고 동맹국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협력의 영역은 차별적으로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은 미국의 동맹체제의 복원력(resilience)과 유효성(effectiveness)이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 동맹의 경우 냉전기보다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약화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탈냉전기 미국 동맹체제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상호운용성과 안보부담공유의 변수를 논의하며, 이 두 변수를 중심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신정부 등장과 함께 시작될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정에 기여해보고자 한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하는 정책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글로벌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격상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이 동맹관리를 위한 자원투입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단순히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비대칭동맹으로 간주되어왔던 한미동맹이 보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비교 및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부터의 전략적 위협의 유형을 바탕으로 역내 동맹국들에게 선별적 안보협력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을 다루고 있는데, 호주와 일본의 사례는 사실상 아태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과 유사한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은 지극히 역량기반 군사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즉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 역량을 갖춘 국가들에 대한 협력영역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협력영역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혹은 진화해야 하는 것인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가운데 유사한 역량을 가진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어떠

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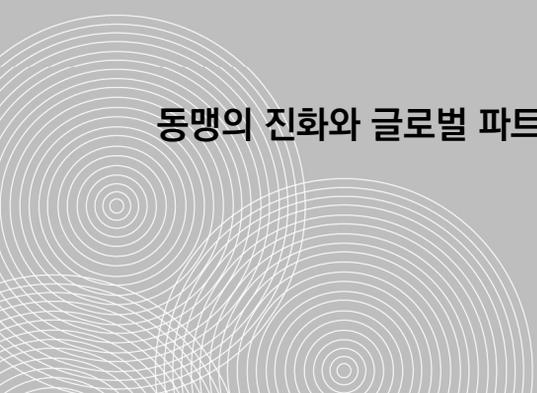
또한 아시아·태평양 역외 임무 역시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역량을 고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의 협력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를 이끌어낸 전략 환경의 변화양상에 대해 논의한 후, 이로부터 도출된 역량중심 군사전략을 논의한다. 이후 미국 동맹체제의 복원력과 유효성의 개념을 논의하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성의 개념 하위에 존재하는 상호운용성과 안보부담공유를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차원의 진화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역내 세력균형과 국내 정치적 동학, 그리고 각 동맹체제의 상호운용성과 안보부담공유 논의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의 영역이 확장되는지를 식별해보고자 한다. 특히 상호운용성 제고와 안보부담 공유는 궁극적으로 선형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호주와 일본의 국내정치적 동학을 살펴보는 것은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이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결론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 Ⅱ. 탈냉전기 미국 동맹체제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등장

정구연(통일연구원)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1. 탈냉전기 전략환경과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미국과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최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며, 이를 통해 동맹국 간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유형과 외연을 확대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동맹차원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우선 지난 2001년 『4년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중심(threat-based) 접근법에서 역량중심(capability-based) 접근법으로의 국방전략 전환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과정에는 미국이 처한 전략 환경 속에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누가’ 미국의 적국이 될 것인가 혹은 ‘어떠한 국가’와 미국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본 보고서가 공개되었던 2001년의 9·11 테러사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냉전기에는 미국이 소련과 공산국가들이라는 고정된 위협에 대응해야 했다면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위협은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냉전기 전세계에 배치된 영구 주둔지(permanent bases)로부터의 원장작전만으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근거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sup>1)</sup> 과거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G. W. Bush) 행정부의 신군사독트린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그리고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논의 역시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미국은 스스로가 마주할 불특정 적국(혹은 행위자)이 어떠한 역량을 통해 주변국을 강압하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을 통해

---

<sup>1)</sup> Michael McDevitt, “Th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there an American Strategic Vision for East Asia?,” *Issues & Insight*, vol. 7, no 1 (2007), pp. 1~16.

미국 동맹국 방어를 억지하거나 미국을 직접 공격하려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 보고서는 강조한다.<sup>2)</sup>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환의 기저에는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적국(adversaries)으로 지목하기보다는 미래 전장의 형태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기 보고서는 적국의 기습공격, 기만, 그리고 비대칭전을 적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정밀타격, 원격탐사(remote sensing), 반접근·지역거부(A2/AD) 대응 역량, 원정군 체계 보완 등 미군의 비대칭전 대응력 우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컨대 이것을 냉전기 ‘위협중심’ 군사전략으로부터 탈냉전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 미국은 명백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맹국들이 얻게 될 안보상의 이익을 분명히 한 반면, 이제 각 동맹을 예방적 차원의 미래지향적 사고(forward-thinking)와 선제적 협력(preemption)을 함께 할 수 있는냐의 기준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다.<sup>3)</sup>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5년 미국의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은<sup>4)</sup>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대면해야 할 안보위협을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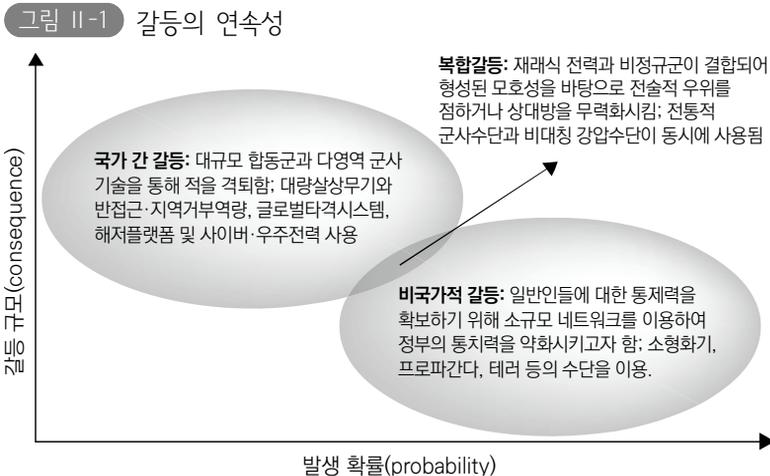
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인식하는 국제전략환경은 세계화의 과정 가운데 관찰되는 기술 확산과 인구학적 변화 가운데 놓여있다. 우선

<sup>2)</sup>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30, 2001), pp. 13~14.

<sup>3)</sup> 윤덕민·박철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조정과정 비교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2 (2007), p. 24.

<sup>4)</sup>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The United States Military’s Contribution to National Security (June 2015).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인구는 고령화의 추세 속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들 증가추세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균열과 자원 부족, 침체된 경제 상황은 이들 국가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 혹은 국가로의 이주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또 다른 안보위협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주 이후 이민자로서 겪는 소외와 지병, 문화적 차이로부터 갖게 되는 불만이 기술 확산(technological diffusion)의 추세와 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의 요소 역시 안보위협의 요소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위협요인 이외에도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 중국의 현상 변경행위 등 적지 않은 국가행위자 역시 미국의 전략 환경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컨대 미국이 인식하는 전략환경이란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로부터의 전략적 위협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출처: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The United States Military's Contribution to National Security, p. 4.

미국의 선별적인 개입보다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위협에 대한 동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상기의 『국가군사전략』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림 II-1〉의 유형화에서 나타나있듯, 전략환경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위협의 실체는 폭력적 극단주의 네트워크(violent extremist network)와 미국의 단극적 자유주의 질서의 현상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로 좁혀진다. 이들의 갈등 유형은 전통적 국가 간 갈등 형태로부터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비대칭위협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는 특히 행위자의 다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보유하고나 접근 가능한 위협수단, 예컨대 탄도미사일 확산, 정밀타격기술, 무인기술, 우주 및 사이버능력, 대량살상무기 등 전통적 무기체계 그리고 소형화기, 테러리즘, 프로파간다 등 비대칭 혹은 비동적(non-kinetic) 위협 수단까지 그 위협의 양상 역시 매우 복잡적이다. 이러한 무기체계 혹은 기술들은 다양한 행위자의 유형과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혹은 미국이 가진 군사적 우위를 잠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 즉 미국의 압도적인 무기체계가 가진 미국의 역지와 갈등관리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국의 단극적 자유주의 질서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최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비대칭위협으로 개념화되는 복합갈등(hybrid conflict)의 등장이다. 복합갈등은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작전수행과정 혹은 남중국해 중국의 해양전략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표 II-1〉에서와 같이 미국은 국가행위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지, 거부, 패배(deterrence, denial, defeat)뿐만이 아니라 비국

표 II-1 미국 국가 이익구조의 위계

<p>미국의 국가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미국 시민,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안보</li> <li>• 기회와 번영을 확장시키는 국제경제체제 속에서 미국경제 활성화</li> <li>• 국내외에서 보편적 가치 존중</li> <li>• 미국이 주도해온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발전을 통해 평화, 안보, 및 초국적 도전에 대한 협력 강화</li> </ul>
<p>미국의 국가안보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생존(survival of the nation)</li> <li>•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예방</li> <li>• 글로벌 경제체제의 안보</li> <li>• 동맹국들의 안보와 신뢰도 제고</li> <li>•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보호</li> <li>• 보편적 가치의 유지 및 확장</li> </ul>
<p>미국의 군사적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대국에 대한 억지, 거부, 및 패배(deter, deny, and defeat)</li> <li>• 폭력적 극단주의 조직 분열, 격하 및 패배(disrupt, degrade, and defeat)</li> <li>•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li> </ul>

출처: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The United States Military's Contribution to National Security," p. 5.

가행위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조직차원의 분열, 격하 및 패배(disrupt, degrade, and defeat)를 군사적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변한다. 즉 전자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은 가장 강력한 합동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핵능력과 전세계 전진배치를 통한 군사적 억지가 미국 군사적 목적의 우선순위이고, 만약 이것이 실패했을 시 군사력 투사를 통해 적국의 목표를 거부(denial)하거나 혹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 유형의 경우, 미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네트워크의 공격 혹은 작전수행 관련 계획을 사전에 분열시키고, 이들 네트워크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구조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리더십 제거, 재정지원 차단, 해외전사모집과정 차단, 정보전 수행 필요성을 언급한다. 한편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작전의 경우 사실상 장기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피하기에,

정치적, 재정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류국가들(like-minded)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전략 환경 인식을 기반으로 <표 II-1>에서와 같은 국가이익의 위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차원에서의 군사적 전략 변화, 즉 위협중심 군사전략에서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한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표 II-1>의 미국 국가 이익구조의 위계질서를 보듯, 미국의 국가이익 가운데 안보적 영역에서 선별되어 우선순위화된 것이 바로 국가안보이익이며, 군사적 이익은 이러한 국가안보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015년 미국의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보고서에서 처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기존 미국 동맹국들은 새로운 역할과 임무, 그리고 책임을 기대하고 있다. 즉 과거 위협중심 군사전략은 냉전기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의 고정된 위협에만 대응하며 역내 미국의 작전수행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 반면, 탈냉전기 미국의 동맹국들은 역량중심 접근법에 따라 스스로의 안보강화를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상호방어조약에 명시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안보현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동맹 협력의 상황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sup>5)</sup>

---

<sup>5)</sup> Jihyun Kih and Jaechun Kim, "The Capability-Based Analysis of Alliance Transformation in the Asia-Pacific: Focusing on the ROK-US and US-Philippines Alliance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3 (2016), p. 3, pp. 369~389.

표 II-2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영역수행 선호도 (2014)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국	미국
HA/D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formation sharing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KO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ounter-terroris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Ground operatio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oastal patrol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ritime domain awarenes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S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yber securit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issile defens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ir superiorit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Undersea warfar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peditionary warfar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ounter-A2/A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출처: Michael J.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Washington D.C.: CSIS, 2014), p. 9.

다시 말해,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동맹 체제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는 동맹 간 협력 네트워크의 형태뿐만 아니라 협력의 영역차원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는 역량중심 군사전략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동맹국별로 차별적인 역할과 임무, 그리고 책임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탈냉전기 안보환경에 대해 동일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표 II-2>는 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외에서 수행하는 안보영역 임무수행 선호도를 보여준다. <표 II-2>에서 보여지듯 역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영역도 존재하지만, 안보영역 임무의 경쟁성(competitiveness) 수준에 따라 공통적인 선호가 부재한 영역도 많다.<sup>6)</sup> 더욱이 역내 국가별 역량의 차별적 분포는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2014년 CSIS의 보고서 『Federated Defense in Asia』와 2016년 애쉬턴 카터(Ashton B. Carter) 전 미국방부 장관의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제안 등으로부터 미국이 구상하는 협력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데, 미국이 구상하는 협력 네트워크 역시 지극히 역량중심 네트워크이다. 이는 미국이 축소(retrenchment) 국면에 놓여있으며, 국방예산 역시 시퀘스터의 제약 하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주둔국의 반감 및 미군 해외 주둔의 비효율성에 대한 미국 국내적 차원의 문제제기<sup>7)</sup> 등의 문제와도 맞물려있기 때문이

<sup>6)</sup> <표 II-2>의 세로단(column)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감에 따라 안보영역 임무차원의 경쟁성이 높아짐을 가정하고 있다. 즉 하단으로 내려감에 따라 더욱 국가들 간의 협력이 어려운 형태의 안보영역 임무임을 가정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안보영역에 대한 국가별 관심이 반드시 해당국가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up>7)</sup> John Glaser, "The Case Against US Overseas Military Bases: Why They Are No Longer a Strategic Asset," *Foreign Affairs*, July 25, 2017.

다. 더욱이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국방비를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역량 중심 협력 네트워크, 즉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량중심 협력 네트워크는 '저비용, 소규모 주둔 (low-cost, small-footprint)'을 지향한다. 즉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다국적군 주둔지를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협력 네트워크 참여 국가들과의 합동훈련과 군수지원, 공동 작전 수행 등 안보부담공유(burdensharing)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극대화를 통해 대비태세(readiness)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정되는 것이다.<sup>8)</sup> 실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은 2014년 160회에서부터 2015년에는 175회로 증가하였으며, 점차 합동군사훈련의 범위와 복잡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있다.<sup>9)</sup> 물론 미국은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모든 임무에 스스로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애쉬턴 카터 전 국방부장관이 제안했던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sup>10)</sup>에서 나타났듯 미국은 스스로의 관여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아시아 역내국가들 스스로 다자안보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sup>8)</sup> 물론 CSIS의 보고서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의 제도적 기반으로 국방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량 결집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미국 내에서도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Michael J.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Stephanie Snok Kostro and Rhy McCormick,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Federated Defense* (Washington D.C.: CSIS, 2015), p. 12.

<sup>9)</sup>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ICAS), *Report on the Military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ICAS, 2016), <<http://chinaus-icas.org/materials/test/>>.

<sup>10)</sup> Ash Carter,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 Building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6),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16-10-17/rebalance-and-asia-pacific-security>>.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량을 고려한 협력영역의 선별과 이에 따른 동맹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역량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호주,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복합갈등을 억지하고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역량이 열위에 있는 동맹국들과는 합동훈련을 통해 이들의 대테러작전 역량제고, 평화유지활동, 재난구호, 법집행강화, 탐색구조(search and rescue)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sup>11)</sup> 요컨대 미국은 동맹국의 역량과 위협인식을 고려해 선별적인 동맹협력의 진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표 II-1>에서 나타난 미국 국가이익의 위계구조 유지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동맹국의 역량을 기준으로 차별적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전구(theater) 차원으로 논의의 폭을 좁혀보면, 미국은 이 전구 내에서는 전통적 안보현안, 특히 미국의 단극적 세력균형 및 규칙기반 질서 유지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군의 첨단 전략자산 배치와 더불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재균형 전략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인도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조한다. 가장 최근 공개된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 관련 백악관 보고서 『Fact Sheet: Advancing Rebalance to Asia and the Pacific (2015.11.16.)』 역시 미국은 역내 파트너 역량을 활용해 규칙기반 질서를 유지,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보여주었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

<sup>11)</sup>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The United States Military's Contribution to National Security, p. 10.

통령 당선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은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반대로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을 대부분 계승할 것이라 최근 밝힌 바 있으며, 협력 영역의 경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재난구호와 같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역내 개별 동맹국과의 논의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개별 동맹국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은 2015년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고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격상을 선언했으며, 동북아 군사동맹으로부터 기후변화, 빈곤퇴치, 폭력적 극단주의 대처, 우주탐사 등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진화를 모색 중이다. 미국과 호주 역시 2011년 이후 개발협력과 평화유지 활동, 사이버안보에 이르는 다원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미호동맹은 일본과 인도 등과의 소다자협력으로도 전환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 지난 2015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의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를 개척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한미동맹 공동비전, 2010년 한미국방협력지침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비전을 공유해왔으며, 2014년~2015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하였다. 협력의 영역은 사이버 우주,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으로 선정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사뭇 상이하다. 예컨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중동 아랍국가들에 대한 질적 군사적 우위(Qualitative Military Edge: QME)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협력영역이며, 이외에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파키스탄의 국방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은 역량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평화유지역량, 초지역적 극단주의(transregional extremism) 대응역량 제고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미국이 상정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이 역량중심 전략으로 전환되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냉전 종식과 함께 마주한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기존의 위협중심 군사전략의 유효성이 낮아짐과 동시에 위협의 유형이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비대칭위협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동맹국들의 역량결집이 더욱 중요한 군사전략의 요소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역량결집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 스스로가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통해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위협인식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가의 의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 절은 이러한 소결을 동맹의 유효성과 복원력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식별해보고자 한다.

## 2. 동맹의 복원력과 유효성

동맹이란 미래에 갈등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의 상호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간의 공식적인 합의이다.<sup>12)</sup> 동맹 협력의 진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거대이론 차원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차원에서의 연구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동맹협력이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극복하며 복원력(resilience)과 유효성(effectiveness)을 유지할 수 있었던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글로벌

<sup>12)</sup> T. Camber Warren, "The Geometry of Security: Modeling Interstate Alliances as Evolving Network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 (2010), pp. 697~709.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거대이론 차원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냉전 종식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냉전기 형성되었던 동맹체제가 냉전 종식 이후로도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복원력(resilience)의 개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냉전기 형성되었던 동맹체제가 와해되거나 약화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sup>13)</sup> 신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동맹이란 기존에 주어진 이익들이 반영된 형태의 협력이기에, 동맹의 협력은 동맹국가 이익의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sup>14)</sup> 또한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맹의 복원력은 세력균형 혹은 위협균형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에, 구소련의 와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냉전기 동맹체제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더 나아가 일부 신현실주의자들은 미국 동맹 체제 내부에서의 세력균형으로 인한 경쟁(rivalry)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sup>15)</sup> 즉 구소련의 붕괴란 결국 미국의 단극적 순간(unipolar moment)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 역시 균형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신현실주의 이론은

---

<sup>13)</sup> Ted Galen Carpenter, *Beyond NATO: Staying Out of Europe's Wars*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4); Michael Brown, "The Flawed Logic of NATO Expansion," *Survival*, vol. 37, no. 1 (1995), pp. 34~52; Michael Mandelbaum, *The Dawn of Peace in Europe* (Washington D.C.: Twentieth Century Foundation, 1996), p. 4.

<sup>14)</sup> Douglas Gibling and Toby Rider, "Prior Commitment: Compatible Interests versus Capabilities in Alliance Behavior,"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0, no. 4 (2004), pp. 309~330; T. Clift Morgan and Glenn Palmer, "To Protect and To Serve: Alliance and Foreign Policy Portfoli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2 (2003), pp. 180~203; Andrew Long, Timothy Norstrom and Kyeonghi Baek, "Allying for Peace: Treaty Obligations and Conflict between Allies,"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2007), pp. 1103~1117.

<sup>15)</sup> Zoltan Barany and Robert Rauchhaus, "Explaining NATO's Resilience: 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Useful?,"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2, no. 2 (2011), pp. 286~307.

냉전 종식 이후 복원력을 유지해온 미국의 동맹체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현실주의 이론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미국 동맹체제 자체의 특징을 재정의 하는데, 예컨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전통적 동맹이라고 개념화하기보다는 보장조약(guarantee treaty)으로 개념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동맹의 재정의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는 균형 전략보다는 편승(bandwagon)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한편 신자유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의 경우 미국 동맹체제의 복원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예측을 제시한다. 이는 미국의 동맹체제는 냉전기 동안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동맹 간 협력과 정은 즉흥적(ad hoc)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규칙과 공동결정과정, 연합사령부 등과 같은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18)</sup> 물론 신자유제도주의 관점이 동맹체제의 복원력에 대해 완벽한 예측을 제시하는 것은 아

<sup>16)</sup> Christopher Layne,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1993), pp. 5~51; Kenneth Waltz, "Realist Thoughts and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1990), pp. 21~37; Kenneth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1 (1993), pp. 3~43.

<sup>17)</sup> Kenneth Waltz, "NATO's Expansion: A Realist's View," in *Explaining NATO Enlargement*, ed. Robert Rauchhaus (London: Franc CAss, 2001), pp. 23~38; Randa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pp. 72~107; Tkafumi Ohtomo, "Bandwagoning to Dampen Suspicion: NATO and the US-Japan Allianc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3, no. 1 (2003), pp. 29~55.

<sup>18)</sup> Helga Haftendon, Robert O. Keohane, and Celeste Wallander eds., *Imperfect Union: Security Institutions over Time and Sp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1~46; Celeste Wallender, "Institutional Assets and Adaptability: NATO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54, no. 4 (2000), pp. 705~735.

니다. 동맹국들이 제도의 존재로 인해 동맹협력과정에서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를 줄여나가고 동시에 전략적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동맹 이외에 새로운 효율적인 협력의 틀이 제시된다면 동맹국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p>19)</sup>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의 경우, 국제제도가 규범을 확산시키고 또한 규범이 국가의 선호(preference)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sup>20)</sup> 민주평화론의 시각에서 제시된 민주주의 동맹국들 간의 친화성도 이러한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성주의 시각의 문제점은 인과관계의 방향이 양방향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독립변수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혹은 내재성(endogeneity)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성주의 이론 자체가 냉전 종식 이후에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냉전 종식 직후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ex ante)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맹의 복원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이미 복원력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시된 사후적(ex post) 해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은 동맹 복원력의 결정요인에 대해 합의를

---

<sup>19)</sup> Barbara Koremenos, Charles Lipson and Duncan Snidal, "The Rational Desig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4 (2001), pp. 761~799; Andrew Moravcsik,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51, no. 4 (1997), pp. 513~553.

<sup>20)</sup> Alexandra Gheciu, "Security Institutions as Agents of Socialization? NATO and the New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no. 4 (2005), pp. 973~1012; Thomas Riss-Kappen, "Collective Identity in a Democratic Community: The Case of NATO,"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 Peter Katz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357~399; Alastair Johnston, "Trea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Security Environ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4 (2001), pp. 487~515.

이루고 있지는 않다. 경험적 분석에 따라, 혹은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체제에 따라 그 설명력의 수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위의 시각들이 제시하는 변수들이 모두 존재해야만이 미국 동맹체제의 복원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sup>21)</sup> 한편 이러한 거대이론 차원의 설명이 노정하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논의는 동맹체제가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점이다. 즉, 동맹의 복원력에 대한 논의는 동맹의 존재 가능성의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둘째, 결과적으로 기존의 논의는 동맹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과 동맹의 협력이 성공적일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동맹이 형성되었을 때의 조건과 동맹의 진화되기 위한 조건의 구별을 통해 동맹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서로 다른 환경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연구는 미국의 동맹의 유효성(effectiveness)의 측면을 강조하며 수행적(operational) 차원의 변수들을 논의하고 있다. 즉 동맹이 고정된 이익의 유무에 따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기반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데 어떠한 동맹국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동맹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1)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비용(cost)과 위험(risk) 안에서 미국 동맹국이 미국의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2) 동맹전략의 수정이 미국과의 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sup>22)</sup> 즉 이러한 판단기준은 궁극적으로 미국동맹국과의 안보부담공유 논의와 상호운용

<sup>21)</sup> Zoltan Barany and Robert Rauchhaus, “Explaining NATO’s Resilience: 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Useful?,” pp. 286~307.

<sup>22)</sup> Jonathan Pollack, “Order at Risk: Japan,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Paradox,” *Asia Working Group Paper 5* (September 2016), p. 3.

성의 논의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군사작전 수행상의 실무적 협력 요건에 대해 방점을 두는 것은 앞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동맹 복원력의 구성요건들, 즉 국가이익 및 위협인식으로부터의 세력균형,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협력의 관성(inertia), 그리고 규범의 내재화와 정체성의 형성 등 동맹국 간의 상호 기대와 우려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도외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동맹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량기반 군사전략상에 있어 미국이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맹국이 안보부담공유 비율 조정을 통해 미국과 함께 결집할 수 있는 역량의 확대와 상호운용성 제고를 통한 협력의 수준 제고이다.

우선 안보부담공유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동맹국들 간의 부채(liabilities)<sup>23)</sup> 혹은 “동맹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물질적, 경제적 비용의 공평한 배분(fair distribution)”<sup>24)</sup>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단순히 군사적, 물질적인 안보부담 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intangible) 차원의 사회적, 문화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보부담 공유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동맹 내 정치(intra-alliance politics) 차원에서 동맹국 간 비대칭성 관계조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냉전기 미국의 동맹은 불가피하게 양극체제의 결과물로서 비대칭동맹의 형태로 구조화되었는데, 약소국의 자율성 양보의 수준에 따라 강대국의 안보지원 의지가 결정되어 왔다. 즉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와 같이 자율성 양보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칭동맹은 강해질 수 있었다.<sup>25)</sup> 비대칭동맹에서는 약소국은 국가존립의 위기에

<sup>23)</sup> George Liska,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p. 26.

<sup>24)</sup>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on Allied Commitment to Defense Spending* (Washington D.C.: DOD, 1981), p. 4.

<sup>25)</sup> Min-hyung Park and Kwang Ho Chun, “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Korean Journal*

대응하여 강대국과의 동맹유지가 필요한 반면, 강대국은 이미 큰 자율성과 안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작기 때문이다. 요컨대 냉전기 비대칭 동맹은 기본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만큼 안보부담공유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만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비대칭동맹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문제를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결부시켜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역량강화 측면에서 동맹국들의 안보부담공유가 높아질수록 강대국과의 대칭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상정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동맹국들이 인식하는 위협의 수준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맹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변수로서의 안보부담공유가 반드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단선적으로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지 않는다. 또한 추후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하겠지만, 안보부담공유에 대한 동맹국 내부의 군사적, 비군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의 범위와 협력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부담공유에 대한 국내정치적 동학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상호운용성이란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1) 서로 다른 동맹군들 사이에 합동 군사조직 구조를 형성하며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2) 합동 군사조직의 효율성, 3) 동맹국들 간의 기술적 역량의 유사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호운용성이란 동맹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enabler)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 (2015).

<sup>26)</sup> James D. Morrow,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05~930.

수준에서의 상호운용성이란 전략적 상호운용성으로서, 이는 고위급 수준에서의 세계관, 전략, 독트린, 군사구조 등에 대한 동맹국들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의지(willingness)를 의미한다.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이들 간에 국제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경제체제 지속에 대한 공유된 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잠정적인 현상변경 행위자에 대한 억지력 제공에 참여하는가 등의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전 수행 혹은 전술적 수준에서의 상호운용성이란 실제로 전술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협력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즉 정치적,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기술적 상호운용성 차원에서 동맹국 내 정치적 리더십이 상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동맹국과의 비대칭성이 클수록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의 재원을 동맹국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동맹국의 역량이 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동맹국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상위의 작전수행-전술적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상호운용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맹국들 간의 역량차이와 작전수행개념의 차이로 인해 기술적 차원의 상호운용성은 언제나 간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상호운용성은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군사강국과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안보부담공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상호운용성과 안보부담공유 사이의 비례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즉 글로벌 파트너십의 범위와 협력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안보부담공유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안보부담공유 내부의 하위 개념들 간 상호작용의 양태는 동맹국들이 처한 국내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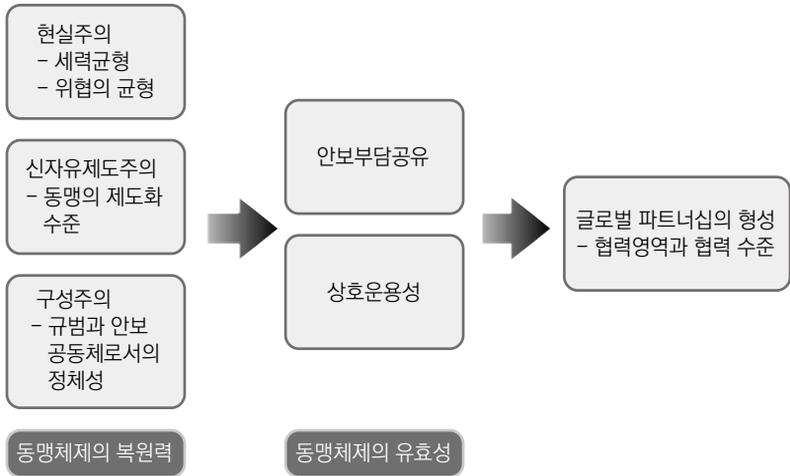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는 상호운용성과 안보부담공유 수준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지적하는데, 예컨대 안보부담공유 (alliance burden sharing), 동맹 타협(alliance compromise), 상호 작용(reciprocity)을 포괄하는 동맹변환지표(criteria for assessing alliance transformation),<sup>27)</sup> 혹은 동맹 응집력(alliance cohesion) 차원에서 제시된 균일한 목적(homogeneity in goals), 위협인식, 전략적 이익의 양립가능성, 지휘 구조(command structure)<sup>28)</sup>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그 가운데 수행적 상호운용성과 정치-전략적 상호운용성의 변수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의 두 차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수행적 상호운용성의 경우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고위급 장성회담과 협의체 운영, 실제 정보 감시 및 정찰(ISR) 협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정치전략상의 상호운용성이란 동맹국 간 전략과 전력구조의 양립가능성, 합동 훈련, 또한 양국 간 협력과정에 있어서의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도전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이다. 한편 안보부담 공유의 경우 동맹국의 국방비 및 국방비 대비 주둔국 프로그램(host-nation program) 운영실태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동맹의 복원력과 유효성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양측의 이론적 논의를 모두 분석과정에 포함하고자 한다.

---

<sup>27)</sup> Jihyun Kih and Jaechun Kim, "The Capability-Based Analysis of Alliance Transformation in the Asia-Pacific: Focusing on the ROK-US and US-Philippines Alliances," pp. 369~389.

<sup>28)</sup> Hyun-Wook Kim, "Substantiating the Cohesion of the Post-Cold War US-Japan Allia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5, no. 3 (2011), pp. 340~359.

그림 II-2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결정요인 분석: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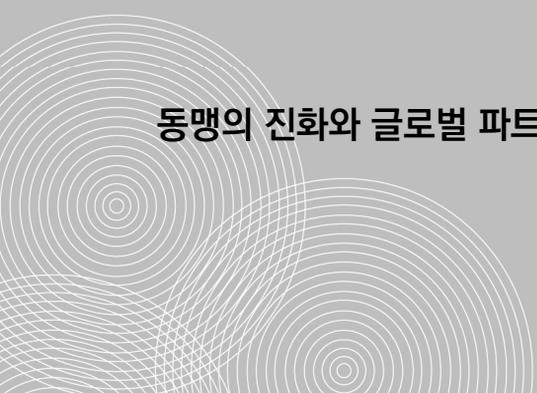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II-2>와 같은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물론 본 연구설계는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동맹체제의 복원력, 즉 냉전 종식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동맹의 유효성, 즉 구조적 변화 이후에 동맹체제가 어떻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변수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동맹의 진화과정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변수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미국의 양측의 입장을 전략적 상호작용(strategic interaction)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 Ⅲ. 미일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이우태(통일연구원)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1. 미일동맹의 전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를 위해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가 설치되었는데 그 지휘권을 미국이 독점, 행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령정책은 미국이 주도하였다. 미국의 대일본 점령정책의 목표는 첫째, 일본이 다시는 미국 및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 타국가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연합 헌장의 이상과 원칙에 구현되어 있는 미국의 목적을 지지할 평화적이며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sup>29)</sup> 결국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의 핵심은 ‘탈군사화’와 ‘민주화’로 요약된다.

1947년 10월에 공포된 일본 헌법(일명 평화헌법) 9조에는 탈군사화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쟁의 포기, 전력(戰力)의 불보유(不保有), 교전권 부인(否認)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1950년 한반도에서의 6·25전쟁 발발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력팽창이 발생하자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일본을 한반도에 대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점령통치 하에 있는 일본을 독립시켜 소련의 세력 확대를 봉쇄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점령정책의 목표를 수정하게 된다.<sup>30)</sup>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일본에 기동력을 갖춘 75,000명 규모의 경찰예비대(Police Reserve Forces) 창설과 8,000명 규모의 해상보안

<sup>29)</sup> 박충석, “미점령기의 정치개혁,” 현대일본연구회 편, 『일본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3), p. 75.

<sup>30)</sup>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89;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출판, 2006), p. 116.

청 증강을 권유하고 일본 요시다 수상은 평화헌법과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치안강화의 목적을 이유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sup>31)</sup>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묵인 아래 합법적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후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과 교전을 한 55개국 중 45개국과 일본은 평화협정을 조인하고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구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미일 안보조약의 핵심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군대를 자국 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허용하며 미국은 이를 수용한다는 것으로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자국의 동맹국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었고, 일본으로서는 미군의 장기 주둔을 보장하여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신안보조약)의 내용 또한 미군의 일본 내 군사기지 주둔권 및 미국의 대일본 안보 공약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서는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구(舊)조약에서는 미국은 일본이 자위력을 점증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新)조약에서는 제3조에서 무력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군사능력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자위력 증강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구조약에는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무조항이 없었으나 신조약 5조에 따르면 ‘양국은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한다’<sup>32)</sup>라는 미국의 일본방어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미일동맹

<sup>31)</sup> 이기완 외, 『동맹의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매봉, 2005), p. 57.

<sup>32)</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q&a/ref/1.html>> (검색일: 2017.06.07.).

이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임을 규정하였다.

1960년대까지의 미일동맹은 미일 안보조약 체결로 인해 그 틀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공동의 군사계획 또는 연합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위협력 지침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75년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고 그 결과 1978년 11월 27일 ‘미일 방위협력 지침(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일명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이 일본 유사시를 대비해 마련한 일련의 군사행동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침공이 일어났을 경우, 공동 대처 행동(coordinated joint action)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작전, 정보, 후방지원 등의 분야에 있어서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협력 태세를 정비하는 데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동작전을 위해 공동작전계획(joint defense planning)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한 공동 연습 및 훈련(joint exercises and training)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sup>33)</sup>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결정된 공동 군사작전 지침으로 이 지침을 계기로 미일 양국 사이의 공동 군사훈련이 확대되고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작되는 등 미일동맹의 비약적인 강화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채택 이후 1980년대 일본은 1950년대 초반 미국의 재무장 압력에도 불구하고 ‘평화지향노선’을 고집하던 것과는 달리 미국의 지원과 협력 아래 ‘군사대국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sup>34)</sup> 1981년

---

<sup>33)</sup>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http://www.mod.go.jp/e/d\\_act/anpo/19781127.html](http://www.mod.go.jp/e/d_act/anpo/19781127.html)> (검색일: 2017.06.07.), 재인용: 송영선,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과 주변사태법,” 『국방과 기술』, 제246호 (1999), p. 21.

<sup>34)</sup> 김승흠 외, 『21세기 일본의 위상』 (서울: 법문사, 1993), p. 234.

5월, 일본 스즈키 총리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일동맹(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built upon their shared values of democracy and liberty)’으로 양국관계가 표현되었고,<sup>35)</sup> 스즈키 총리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일본 주변해역 수백 마일과 해상교통로 1,000마일은 일본의 방위상 필요한 해역이므로 방위력 정비의 목표가 된다”고 밝히면서<sup>36)</sup> 기존의 수동적인 방어 전략인 ‘전수방위’ 전략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진방위’ 전략으로 일본의 방위전략 수정을 천명하였다.

1982년 11월 등장한 나카소네 내각 시기의 미일동맹관계는 이전 어느 시기보다 더욱 강화되었는데 당시 미일관계는 나카소네 총리의 이름과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론야스’관계라고 불릴 만큼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19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일본은 공산주의 소련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에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띄고 있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 안보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 국내에서는 미일동맹은 ‘냉전의 산물(産物)’이라는 인식과 함께 ‘미일 안보체제 무용론’ 또는 ‘동맹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미일동맹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더욱 증가했는데 걸프전 당시 미국은 동맹국의 의무를 일본에

<sup>35)</sup> *The New York Times*, May 9, 1981, <<http://www.nytimes.com/1981/05/09/world/text-of-communicate-on-reagan-suzuki-discussions.html?pagewanted=all>> (검색일: 2017.06.07.).

<sup>36)</sup> 『경향신문』, 1996.10.26., <<http://newslibrary.naver.com/?articled=1996102600329105005&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 (검색일: 2017.06.07.).

요구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파병을 할 수 없게 되자 파병 대신 130억 불 상당의 전비(戰備)를 부담했다. 그러나 종전(終戰) 이후 일본은 쿠웨이트와 미국 어느 쪽에서도 감사의 인사조차 받지 못했고 이러한 현실은 일본 국내에서 자국의 외교를 ‘수표외교(checkbook diplomacy)’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등장하게끔 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에는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 지역 국가 간의 군비경쟁 지속, 한반도 지역의 안보불안 등과 같은 불안정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992년 1월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도쿄선언(The Tokyo Declaration on the U.S.-Japan Global Partnership)’을 통해 양국 동맹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으로 격상시켰다. 미일 양국은 ‘도쿄선언’을 통해 두 나라가 탈냉전 이후 세계 1, 2위의 시장지향형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특별한 책임을 갖게 됐다고 전제하고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며, 양국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문제에서도 협력관계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기존 쌍무적 동맹관계를 전 세계적 동반협력관계로 확대시킬 것을 공언했다.<sup>37)</sup> 도쿄선언의 전문에서 정치·안전 보장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일본과 미일동맹 관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1960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 동맹관계는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십 하에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도록 협

<sup>37)</sup> 한국방위산업진흥회, “美·日 글로벌 파트너십 東京선언(1992.1.)”, 『국방과 기술』(1992), pp. 52~61: 『한겨레』, 1992.01.10., <<http://newslibrary.naver.com/?articleid=1992011000289106001&edtNo=-4&printCount=1&publishDate=19>> (검색일: 2017.06.08.).

력하는데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

미일 양국정부는 미일 안보조약 및 관계체결의 원활한 운영과 신뢰성을 유지·향상시킬 것을 약속한다.

…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군을 전방전개 유지한다.

한편 일본은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국내에 있는 시설 및 지역을 미국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새로 체결된 주일 미군 주둔 경비 특별조치 협정에 따라 주일 미군 주둔경비의 부담률을 보다 높인다.

양국은 자위대와 미군 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쌍방간 방위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sup>38)</sup>

도쿄선언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동맹관계를 한층 격상시킨 미일 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동맹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95년 2월 당시 국방부 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조지프 나이(Joseph Nye) 주도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EASR, 일명 ‘나이 보고서’)』 발표를 통해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 시기의 미일동맹체제가 지속됨은 물론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6년 4월에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 하시모토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U.S.-Japan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냉전 이후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재정의한 것으로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초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미군의 일본 주둔에 대한 이유를 재확인하고 일본 주변사태 시 양국 간 협력 방안 연구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39)</sup> 이 공동선

<sup>38)</sup> 한국방위산업진흥회, “美·日 글로벌 파트너십 東京선언(1992.1),” pp. 53~54.

<sup>39)</sup>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U.S. Joint Declaration of Security: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ecurity.html>> (검색일: 2017.06.08.).

연은 탈냉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족, 인종, 종교분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동맹국과 책임분담을 통해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미국의 의도와 경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세계 정치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결합되어 도출되었다.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1978년 양국이 채택한 방위협력 지침, 일명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1996년 6월 26일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1997년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일명 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신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안정적인 국제환경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평시(平時) 일본은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며 미국은 일본에 핵억지력을 제공하고 주일 미군의 전진배치와 증원에 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sup>40)</sup>

신가이드라인이 구가이드라인과 구별되는 특징은 ‘유사사태’ 관련 내용인데 구가이드라인에서는 극동 지역 유사사태에 관한 규정이 단지 두 문장에 그치고 있으나 신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주변지역 유사사의 미일협력에 대해 3개 분야 40개 항목에 걸쳐 세부 협력사항을 확대했다. 아울러 구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주변사태 발생 시 미일 양국의 군사협력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에 ‘자위대(自衛隊) 기지의 공동사용 및 그 밖의 편의 제공’만 규정하였지만 신가이드라인에서는 공해상에서의 기뢰제거 및 선박검사, 후방에서의 미군에 대한 병참물자 보급, 수송, 정비, 그

---

<sup>40)</sup>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http://www.mod.go.jp/e/d\\_act/anpo/19970923.html](http://www.mod.go.jp/e/d_act/anpo/19970923.html)> (검색일: 2017.06.07.), 재인용: 차영구,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 오름, 2009), p. 224.

리고 자위대 군사정보의 미군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일본의 대미 군사지원 또는 군사협력의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역할 확대를 규정한 미일 양국의 선언 및 동맹 지침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유지되었다. 미국은 2000년 10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sup>41)</sup>를 통해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와 미국과의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측에 권고하기도 했다.<sup>42)</sup>

미일동맹관계는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당시 고이즈미와 부시와의 관계는 과거 ‘론야스’ 관계와 비견될 정도였다. 9·11 사태 이후 일본은 신속하게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대해 지원의사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협조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2005년 3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전략 목표(strategic objectives) 중 하나가 ‘동맹과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연대강화(strength alliances and partnerships)’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에 확신을 줘야한다(assure allies and friends)’고 밝히고 있다.<sup>43)</sup> 이에 2005년 3월 19일 일본을 방문한 라이

41)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u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2000).

42) 송화섭, “미일동맹의 변혁과 보통동맹화,” 『국방정책연구』, 제71호 (2006), pp. 46~47; 이우태·김동수,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지지 요인 분석,” 『동서연구』, 제26권 3호 (2014), p. 103.

43)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

스 국무장관은 “일본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에게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본보기이다 …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이다 … 일본은 점차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맡아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 일본이 자유의 확산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이다”라고 밝히며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미국의 인식을 표현했다.<sup>44)</sup>

그러나 2009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의 미일동맹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미일동맹은 대칭형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주변국인 중국 및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함으로써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근간으로 하던 기존의 일본 대외정책과는 다른 지향점을 드러냈다.<sup>45)</sup> 일본 민주당 정권은 대등한 미일동맹관계를 구축하라는 기조 하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군 지원 업무를 중지시키는 한편 미일 간 합의되었던 후텐마 기지의 이전계획을 번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정책은 지난 60여 년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에 익숙한 일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하토야마 총리는 2010년 6월 미일동맹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sup>46)</sup>

일본 민주당 정권 하에서 소원해졌던 미일동맹관계는 2012년 12월

---

tes of America” (March, 2005), <<http://archive.defense.gov/news/Mar2005/d20050318nds.pdf>> (검색일: 2017.06.09.).

<sup>44)</sup>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at Sophia University, Secretary Condoleezza Rice” (March 19, 2005), <<https://2001-2009.state.gov/secretary/rm/2005/43655.htm>> (검색일: 2017.06.09.).

<sup>45)</sup> 이우태·김동수,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pp. 103~104.

<sup>46)</sup> 위의 글, p. 104; 김두승,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6권 (2013), p. 7.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 강화를 대외정책 목표 중 하나로 밝혔으며 2013년 2월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강한 일본은 미국의 이익이 되며, 강한 미국은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양국 간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sup>47)</sup>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동맹의 부활을 강조했는데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신뢰와 강한 연대감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다”고 밝히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의 중심적 기초”라며 “당신(아베 총리)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에는 (오바마라는) 강한 파트너가 있을 것이다”라고 화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밀월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했다.<sup>48)</sup>

2013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일명 2+2회의)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동맹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 차례의 중간보고를 거쳐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의 협력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세계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동맹의 일체화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조정 매커니즘’의 설치, 양국 간 안보협력 범주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하 2015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새로 개정된 2015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범위의 확대와 ‘중국 견제’라는 양국 공통의 군사·안보적 목표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미일동맹의 고성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sup>47)</sup> 김두승,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2016), p. 49.

<sup>48)</sup> 『연합뉴스』, 2013.02.23.,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2/23/0503000000AKR20130223034000073.HTML>> (검색일: 2017.06.09.).

이후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는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일본이 방위비는 적게 내면서 과도하게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일동맹관계가 과거보다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2017년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흔들림 없는 미일동맹관계를 강조하고 향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안보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 미일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번영, 자유의 초석이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바탕을 둔 미국은 일본 방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언급했다.<sup>49)</sup>

## 2. 미일동맹의 진화와 일본 안보이익의 진화

미일 양국은 지속적으로 동맹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동맹의 강화정책 배경에는 중국의 급격한 정치, 군사, 경제적 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양국의 위협인식이 존재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을 자국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대상인 동시에 영향력 유지를 위해 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양면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포괄적 개입(comprehensive engagement)’ 정책을 대중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Engagement and Enlargement)』 보고서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미래 미국의 세계 모니에 도전할 국가로 지목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 ‘포괄

<sup>49)</sup> 『한국일보』, 2017.02.12., <<http://www.hankookilbo.com/v/8ec0b5f47a2a462cac90dce3343396fc>> (검색일: 2017.06.09.).

적 개입전략'을 추구할 것을 명기하였다. 2010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개입'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하는 관계들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경제, 안보, 환경 등 21세기 전 세계 주요 이슈에 중국이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공조체제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2012년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발표한 미일동맹에 관한 보고서(『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에서 "미일동맹은 중국의 재성장(re-rise)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capability)과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롭고 번영된 중국은 미일동맹에도 이익이지만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지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정책과 능력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의 확대, 중국의 정책방향 수정, 그리고 미래의 광범위한 가능성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sup>50</sup>)고 지적하며 중국의 부상 및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4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QDR)』에서 미국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군사·안보적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발생하는 장기화된 영유권 분쟁 또는 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들이 상호파괴적인 경쟁을 조장하거나 분쟁을 유발하여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지도부의 군사력 확대 의도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된 채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빠른 속도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여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성의 주요인으로 중국을 지적하

<sup>50</sup>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 Report of the CSIS Japan Chair (August, 2012), p. 17. (<[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publication/120810\\_Armitage\\_USJapanAlliace\\_Web.pdf](https://csis-prod.s3.amazonaws.com/s3fs-public/legacy_files/files/publication/120810_Armitage_USJapanAlliace_Web.pdf)> (검색일: 2017.09.21).)

고 있다.<sup>51)</sup>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해 미국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방위백서(1993년판)를 통해 중국이 군사현대화를 통해 남사군도, 서사군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해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였다.<sup>52)</sup> 이후 일본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자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2년 일본 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현대화와 해군력의 현저한 증대가 증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2005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일명 2+2회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변혁하고 재편하기로 합의하였다.<sup>53)</sup> 이후 2010년 9월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 어선충돌 사건<sup>54)</sup>은 일본 국민에게 ‘중국위협론’이 실제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협을 갖게 하였다.

---

<sup>51)</sup> U.S. Department of Defense,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p. 4.

<sup>52)</sup>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5.

<sup>53)</sup> 신정화, “對中 중국 겨냥 ‘위협대응형 방위정책’ 채택,” 『통일한국』, 제345호 (2012), pp. 14~15.

<sup>54)</sup>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은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과 이를 단속하던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공무 집행 방해죄로 입건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선장과 선원을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중국 선장에 대해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과의 각료급 교류중지를 발표하고 대일본 희토류 수출 중지를 추진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의 대중 위협인식은 군사·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표 III-1 일본·중국 국내총생산(GDP) 및 국방비 비교

단위: 억 달러

	GDP		국방비	
	일본	중국	일본	중국
1997	44,147.32	9,616.03	408.57	298.79
1998	40,325.09	10,290.43	409.03	327.39
1999	45,620.78	10,939.97	406.85	398.29
<b>2000</b>	48,875.19	12,113.46	<b>408.88</b>	<b>432.61</b>
2001	43,035.44	13,393.95	416.04	522.16
2002	41,151.16	14,705.49	418.11	606.85
2003	44,456.58	16,602.87	418.64	655.43
2004	48,151.48	19,553.47	416.97	724.67
2005	47,554.10	22,859.65	416.22	801.97
2006	45,303.77	27,521.32	410.91	926.52
2007	45,152.64	35,521.82	405.57	1,036.70
2008	50,379.08	45,982.05	401.67	1,135.42
2009	52,313.82	51,099.54	409.19	1,375.12
<b>2010</b>	<b>57,000.98</b>	<b>61,006.20</b>	410.63	1,444.99
2011	61,574.59	75,725.54	416.16	1,560.09
2012	62,042.13	85,605.46	411.14	1,693.82
2013	51,557.17	96,072.24	409.40	1,851.52
2014	48,487.33	104,823.71	411.59	2,009.15
2015	43,830.76	110,646.64	411.03	2,140.93
2016	49,393.83	111,991.45	415.69	2,257.13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및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저자 작성,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Milex-constant-2015-USD.pdf>>,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2&type=metadata&series=NY.GDP.MKTP.CD>> (검색일: 2017.09.21.).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국방비 규모는 2000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하였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GDP는 약 104,823억 달러로서 일본 GDP 약 48,487억 달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국 간 GDP 규모 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IRI)의 국방비 지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국방예산(1,375억 달러)은 일본 국방예산(405억 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그 차이가 약 5배가량을 나타내 양국 간 국방력 강화 수준을 짐작케 하고 있다. 결국 중국 경제력의 급격한 성장에 이은 국방부문 투자비용의 획기적 증대는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의 위협인식을 늘어나게 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상호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가지는 구체적인 전략적 가치와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의 대중 봉쇄 또는 견제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정치, 경제, 군사적 성장이 역내 미국의 조정 및 균형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 판단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에 대한 개입과 봉쇄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 있어 '양날의 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갈등관계를 가지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미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대중 봉쇄정책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미국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여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sup>55)</sup>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 국내 경기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경기회복

을 위한 경제정책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중 억지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켜 일본을 미국 대신 중국과 맞서게 하는 일종의 ‘책임전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sup>56)</sup>

둘째,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안보적 성장을 견제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중국의 성장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어 역내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달갑지 않다. 즉 현재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머물고 있는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역내 독자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일본을 미일동맹이라는 틀 안에 묶어둠으로서 일본을 지속적으로 미국의 안보 영향권 아래 머물게 하고 일본의 정치, 군사 대국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역할 및 가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셋째, 미일동맹의 강화는 미국의 안보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한다.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9년 가까운 이라크 전쟁을 치루면서 7,700억 달러(약 874조 원)의 전쟁비용을 쏟아부었고,<sup>57)</sup> 2001년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1,173억 달러(약 133조 원)가 전쟁비용으로 사용되었다.<sup>58)</sup> 또한 전쟁

<sup>55)</sup> 이우태·김동수,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p. 98.

<sup>56)</sup> 위의 글, pp. 99~100.

<sup>57)</sup> 『뉴시스』, 2017.04.0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6166&cID=10101&pI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7_0014816166&cID=10101&pID=10100)> (검색일: 2017.09.21.).

<sup>58)</sup> 『경향신문』, 2017.08.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22209015&code=9702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22209015&code=970201)> (검색일: 2017.09.21.).

이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총 1,700억 달러(약 193조 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sup>59)</sup> 이와 같은 천문화적인 안보비용은 패권국인 미국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며 미국 국내여론도 이 비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엄청난 안보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중동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패권력 약화를 원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 강화라는 정책적 옵션을 선택하였다. 미일동맹 강화도 이러한 정책적 기초 하에 선택된 전략으로 미국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일본의 자위대 파병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일본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약 50억 달러의 자금지원과 자위대를 파병하였다. 이라크 전쟁에 자위대 파병 결정은 기존 일본의 해외파병과는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던 기존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국제협조를 목적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 의료, 물자수송, 도로수복 등을 임무로 하는 평화유지군(PKO) 또는 재건부대 형태로 파견되어 왔으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해외파견은 국제협조의 목적이 아닌 미일동맹 차원에서 파병이었고 이 사례는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 첫 자위대 파병이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패권국으로서의 안보비용을 절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은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 및 미일동맹 강화의 전략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미일동맹체제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역할 및 영향력 증

<sup>59)</sup> 『브릿지경제』, 2017.08.10.,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810010003755>> (검색일: 2017.09.21.).

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탈 냉전기 이후 ‘경제대국’을 넘어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존의 ‘책임분담(burden sharing)’ 관계에서 ‘권한분담(power sharing)’ 관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강화된 미일동맹을 통해 일본 독자의 전략적 역할 수행 및 지역 및 국제이슈에 있어서 활동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미국의 일본 역할 확대 주문은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에게 호재(好材)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일체화’를 통한 역할 분담의 증가는 일본이 과거의 ‘헤게모니 보조자’에서 진정한 ‘헤게모니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에 대한 조정과정과 미일 양국 간의 공동작전 확대에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을 정치·군사적 위협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중국이 정치·군사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그 영향력이 동아시아 역내는 물론 세계에 확대되는 상황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내 패권적 지위를 놓고 중국과의 세력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안보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 대적할 수 있는 군비증강을 하기에는 일본 헌법 9조와 같은 실질적 제약요인이 존재하여 중국과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고 그 상대가 미국인 것이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동맹 강화를 통해 예상 가능한 유사사태에 대한 동맹차원의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합동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비용 효율성을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

셋째, 일본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정치, 군사대국화에 대

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탈냉전기 이후 정치·군사대국이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이유로 인해 일본에 불신을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일본의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정치·군사대국이 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변국들의 반대와 견제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일본에게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장치가 미일동맹인 것이다. 미국은 일본에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러한 압력은 일본에게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를 꾀하는 것에 전략적 명분을 주고 있다.

### 3. 일본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일본 내부 동학

미국과 일본이 양국의 동맹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목적은 양국 공동의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 체제를 자국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정치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본 절에서는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현 아베 정권의 우경화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 정계는 국가재건이라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1955년에 탄생한 일본 친미·보수 성향 정당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이후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 즉 '55년 체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55년 11월 출범한 보수성향의 자민당 정권은 패전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통합과 경제성장을 통해 국

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극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자민당 정권은 일본의 장기적 안정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민당 정권의 정책 목표를 반영한 일본의 외교노선이 ‘요시다 독트린’이다.

요시다 독트린의 핵심은 군사·안보 문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본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는 ‘경제 우선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은 ‘헌법 제9조 하의 기지제공을 전제로 한 강화와 독립’을 전제로 하는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6·25전쟁 발발과 더불어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미군의 전진기지이자 수송기지 그리고 훈련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등 6·25전쟁에서 미국의 ‘총체적 후방기지’ 역할을 하였다.<sup>60)</sup> ‘요시다 독트린’에 근거한 안보분야에서의 일본의 절대적 대미의 존성은 냉전기간 지속되었고 방위분야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했다.

1980년대 들어서서 일본은 무역호황을 기반으로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되자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1982-1987)는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른 일본은 국제정치 문제에도 관여를 해야 하며 세계정치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국제국가일본’을 주창하였다.<sup>61)</sup> 나카소네 총리는 안보분야에서 일본은 과거의 ‘요시다 독트린’에서 벗어나 대등한 미일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자주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대등한 미일관계’나 ‘자주방위력 강화’의 출발점은 기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부정하거나 동맹 중요성의 저평가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 증

<sup>60)</sup> 남기정,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에 대한 재검토: “없는 메이저국가” 구상과 미일동맹의 현실,” 『일본연구논총』, 제37호 (2014), pp. 194~196.

<sup>61)</sup> 최운도, “미일관계와 일본의 국가전략: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일본연구논총』, 제44호 (2016), p. 221.

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고 일본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 걸프전쟁에서 일본이 상당액의 전비(戰費)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수표외교’에 대한 비난이 일고 일본 정부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1993년 당시 자민당 당수(黨首)였던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국가론’이다. 보통국가론의 핵심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 여느 나라와 같이 군사력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의 일원으로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공헌하자는 것이다. 보통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시발점은 1992년 제정된 일본의 「PKO 협력법」 제정이었다. 이 법은 당시 야당의 반발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PKO 참여 5원칙<sup>62)</sup>’을 포함시켜 일본 자위대의 PKO 참여 요건 및 임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였지만 전후(前後) 금기시되던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정계에서는 ‘보통국가’로의 복귀를 시도하였으나 이 노력은 1993년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자민당 일당체제의 붕괴와 함께 등장한 호소카와 연립정부와 무라야마 연립정부 시기에는 미일 양국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당시 연립정부의 최대세력이던 사민당은 북한중시 정책을 취하고 있어 연립정부의 한 축이던 자민당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웠고 친미·보수 성향의 자민당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안보체제 강화에 소극적인 사민당과의 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내정치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동맹관계 유

---

<sup>62)</sup> PKO 참여 5원칙은 일본의 PKO 참여를 위해서는 (1)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2) PKO활동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3) 무력사용은 정당방위 경우에만 가능하다 (4) 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병력을 철수한다 (5) PKO 참여는 분쟁 당사자 간 정전 합의가 전제된 경우에 한한다 등이다.

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끔 하였고 동맹해체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sup>63)</sup>

탈냉전 이후 일본 국내정치구도의 변화로 인해 동맹관계의 균열을 경험한 미일동맹은 1996년 하시모토 내각의 출범과 함께 중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시모토 내각 시절 일본은 ‘미일안보공동선언’을 통해 미일동맹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양국 동맹관계 강화를 천명하였다. 또한 1997년 ‘미일신(新)방위협력지침’ 합의를 통해서도 미일동맹의 성격을 기존 동아시아 지역 방어를 위한 군사동맹에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동맹으로 확대시켰다.<sup>64)</sup> 당시 하시모토 내각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던 국내정치적 이유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민당 세력의 약화와 야당인 신진당의 역할 때문이었다. 당시 사민당은 당내 우파 의원들의 탈당과 1996년 총선 참패로 인해 연립정부 내에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자민당 세력이 늘어나면서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반대세력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제1야당이었던 신진당이 미일동맹 강화 노선에 찬성을 하면서 미일 양국은 새로운 동맹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일 신안보협력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군사력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는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입법 조치하였다. 1998년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파 내각으로 출범하였던 오부치 내각이 위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였던 자유당과 공명당이 미일동맹 복원이라는 자민당의 외교노선에 찬성하였기 때문이다.<sup>65)</sup>

<sup>63)</sup> 이기완,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 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3권 1호 (2010), p. 37.

<sup>64)</sup> 위의 글, p. 37.

<sup>65)</sup> 위의 글, pp. 38~39.

2001년 4월 미일동맹 중시파가 중심이 된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과 함께 일본은 대미 중시외교를 펼치며 미일동맹이 아태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이즈미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후방지원을 원활히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와 자위대의 무기사용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PKO협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육상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이와 같이 고이즈미 내각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동맹국으로서 신속히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 국내 정당 내 역학관계의 변화와 혁신 정당의 쇠퇴가 있다. 우선 자민당에서는 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당내 최대 라이벌 세력이던 하시모토 계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또한 자민당과는 동맹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여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 구축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경우 하토야마 유키오가 당권을 장악했는데 하토야마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해서는 미일안보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물로서 하토야마의 민주당 당권 장악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차이는 상당히 좁혀졌다.

또한 민주당은 자민당으로부터의 정권탈환을 목표로 미일동맹관계 강화를 주장하던 오자와 이치로의 자유당과 합당을 하여 자민당이 추구해온 미일동맹관계 강화에 일본 정계가 전체적으로 동일노선을 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당정치에서 미일안보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던 사민당과 미일동맹 및 자위대의 합헌성을 부정하던 공산당이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몰락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하는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항세력이 일본 정계에 전무(全無)한 상황이 되었다.<sup>66)</sup>

1955년부터 시작된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1993년 일당체제가 붕괴되

기도 했지만 연립내각 구성 형태로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2009년까지 54년 동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일본 자민당의 대외정책 노선이 곧 일본의 정책기조로 이어졌으며 자민당이 미일동맹관계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정책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자민당 정권은 일본의 군사력 소유를 금지해온 ‘평화헌법’과 지속적으로 국제이슈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해온 ‘미일동맹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점진적인 군사력 확대와 자위대 활동영역의 확대 같은 조치들을 통해 해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후(戰後) 일본의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모든 위정자(爲政者)들은 미국과의 우호적인 동맹관계 유지가 외교정책의 최대 과제였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후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세력은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과 저자세 외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보통국가화’라는 명목 하에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과 함께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경화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부정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sup>67)</sup>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sup>66)</sup> 위의 글, pp. 39~40.

<sup>67)</sup> 아베 신조 총리는 2014년 10월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회답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회원국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sup>68)</sup>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고 자위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69)</sup> 이 조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인 일본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국가이지만 일본 헌법은 제9조(일명 평화헌법)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방위의 원칙<sup>70)</sup>을 유지해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1968년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현행 헌법 제9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위만 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sup>71)</sup>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2006년 자신의 1차 내각 시기에 기존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경시키고자 ‘안보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 제9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당시 아베 1기 내각이 단명하여 헌법 재해석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재해석 시도는 2012년 아베 2기 내각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2006년과 동일한 명칭의 ‘안보법제간담회’를 재발족시켰고 이 간담회는 2014년 5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재해석을 요청하

<sup>68)</sup> ‘개별적 자위권’은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침략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up>69)</sup> UN Charter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p>70)</sup> 전수방위란 상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보유 정도와 행사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방위전략을 말한다.

<sup>71)</sup> 『주간동아』, 제868호 (2012.12.24.),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5129/1>> (검색일: 2017.09.23.).

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sup>72)</sup> 이후 아베 정부는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것을 결정하였고 자민·공명 연합여당은 2015년 9월 19일 새벽에 관련법안인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PKO협력법」, 「주변사태법」을 포함한 11개 법안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평화지원 법안」을 강행처리하였다.<sup>73)</sup>

또한 이 기간 중에 일본은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미일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주변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방위협력이 가동되는 상황을 구체화시키며 ‘동맹조정 매커니즘’의 설치를 통해 평상시 양국의 안보협력 범주를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일본으로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탈바꿈시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게 하는 ‘보통국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sup>74)</sup>

결국 아베 정부는 ‘보통국가’와 ‘군사대국’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법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 강화’라는 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부가 안보분야의 우경화 정책(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한 보통국가 추진)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국내정치의 보수화 경향 강화이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2012년 총선과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친미·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총

---

<sup>72)</sup>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2호 (2015), p. 80.

<sup>73)</sup> 위의 글, pp. 80~81.

<sup>74)</sup> 위의 글, pp. 92~93.

선에서 연이어 압승을 거두었고 당시 ‘강한 외교’를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신진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일본 정계 내 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아베 내각 전면에 나섬으로써 안보 관련 쟁점에 대한 보수 진영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 2009년 당선된 의원은 37명이 찬성한 반면 2012년 당선된 의원은 78명이 찬성하였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2009년 34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찬성비율이 2배 가량 증가하였다.<sup>75)</sup>

또한 일본 정당 전체의 이념적 분포에서도 보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자민당 탈당 세력이 만든 ‘민나노당’, ‘일어서라 일본’, ‘태양당’ 등은 기존 자민당보다는 개혁적인 노선을 추구하지만 그 뿌리가 자민당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계에서 보수 의식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선거에서 전국 정당으로 등장한 ‘유신정당’도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정책 노선을 펼쳐 자민당과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당정치에서 진보정당의 쇠퇴 또는 몰락은 일본의 보수·우경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데 일본 정당 역사에서 대표적인 진보정당이었던 사회당은 해체되고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또한 그 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sup>76)</sup>

둘째, 일본사회의 보수화이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는 유권자 층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고 과거 역사에 대해 구속되지 않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정서가 강한 전후(戰後)세대가 일본 사회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들은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하며 주변국

<sup>75)</sup> 고선규,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향후 전망,” 『독도연구』, 제16호 (2014), pp. 317~318.

<sup>76)</sup> 위의 글, pp. 318~319.

과 다소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강한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보수정치인 및 우익 세력과 연계되어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상대적인 일본의 쇠퇴는 일본 국민들에게 지난 20여년의 시간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강한 일본’에 대한 그리움을 확대시켰고 2011년 동 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은 사회불안은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를 이끌고 있다.<sup>77)</sup>

셋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미국 국내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구도 형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본에게 좀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미일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역할 증대 요구는 이미 탈냉전 직후부터 이루어졌지만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체화되고 있고 2000년 12월 『아미티지 보고서』의 내용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는 미일관계 미래상을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로 제시하며 일본을 ‘동아시아의 영국’으로 가정하고 미일 동맹 관계를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해 미일동맹의 협력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재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미일 안전보장협의 위원회(일명 2+2회의)’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재해석 등 일련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헤징(hedging)전략’으로 일본의 역량을 강화

<sup>77)</sup>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제99호 (2013), p. 40;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p. 83.

시킬 것을 추진하고 일본의 세계평화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엔평화유지 활동(PKO)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78)</sup>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과 안보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 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아베 정부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미일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4.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과 전망

냉전기 쌍무적 동맹관계에서 시작된 미일동맹은 탈냉전기를 맞아 일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세 차례(1978년, 1997년, 2015년)에 걸친 방위협력지침(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이후 미일 양국이 이행한 후속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방위협력과 지침의 목적, 평시 협력 조치, 외부세력에 의한 무력공격 시 대처방안,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그리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표 III-2〉 참조).

---

<sup>78)</sup> Joseph S. Nye, "Japan's Self Defense Defense," *Project Syndicate* (2014.08.06.),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joseph-s-nye-explains-why-the-abe-government-s-new-military-doctrine-is-a-positive-development?barrier=accessreg>> (검색일: 2017.09.23.), 재인용: 정철호, 『美·日の對中 동맹전략 전망과 한국의 안보: 중, 일 간 안보 갈등관계를 중심으로』(성남: 세종연구소, 2015), pp. 37~38.

표 III-2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2015 신가이드라인)의 내용

구분	내용	
방위협력과 지침의 목적	양국 간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미일 간 역할/임무, 협력·조정문제에 관해 일반적인 틀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기본 전제 및 사고	미일 안보조약의 기본틀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헌장 규정 및 국제법 준수, 미일 양국의 국내법 및 국가안보정책 기조 준수, 전수방위원칙 및 비핵 3원칙 준수 등	
동맹 내부 조정	동맹조정 매커니즘, 운용면의 조정, 공동계획의 작성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	평시 협력 조치	정보수집·경계감시 및 정찰,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해양안전보장, 자산(asset)보호, 훈련 및 연습, 후방지원, 시설 사용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	비전투원 대피 활동, 해양안전보장, 피난민 대응 관련 조치, 수색·구조, 시설·구역 경호, 후방지원, 시설 사용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대처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작전 구상, 작전 지원 활동 등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발생 시 대처	자산(asset)보호, 수색·구조, 해상작전, BMD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후방지원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관련 협력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국제적 활동에 관한 협력	평화유지활동, 해양안전보장, 파트너의 능력 구축 지원, 비전투원 대피 활동, 정보수집·경계감시 및 정찰, 후방지원 등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3개국 및 다자 간 협력	
	우주에 관한 협력,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출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년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p. 123, 재인용: 이기태·김두승,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38~39.

2015년 2차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미일동맹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1997년 개정에서는 미일 간 협력 분야가 ① 평소협력, ② 일본이 위협상황에 처할 수 있는 ‘주변사태’ 상황에

서의 협력, 그리고 ③ 일본이 전쟁 상황에 빠지는 ‘일본 유사시’의 협력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① 평소 협력, ② 일본의 평화와 안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영향사태’ 시 협력, ③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응, ④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발생 시 대처, 그리고 ⑤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관련 협력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표 III-3〉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1997년 가이드라인에서의 ‘주변사태’가 ‘중요영향사태’로 재정의되고 일본 권역에 한해 있던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 범위에 대해 지리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도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15년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일본, 대만해협에서의 유사사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해상교통로(sea line)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에도 양국의 공동 대응을 명시하였다. 이는 미일동맹의 지리적 작전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되고 미일동맹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각 종 사태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미일동맹이 쌍무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동맹 차원이었다면 2015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의 미일동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 동맹관계가 전환되었고 일본의 역할도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9)</sup>

---

<sup>79)</sup> 김승현, “아베정권의 안보정책 변화와 의의: 평화안전법제 논의를 사례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0호 (2015), pp. 118~119; 이기태·김두승,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p. 40.

표 III-3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변천사

연도	1978	1997	2015
상태	제정	1차개정	2차개정
이유	미일 방위협력 구조와 역할 규정	냉전 해체 뒤 안보환경 변화와 북핵 위협	미국 영향력 축소에 따른 일본 역할 확대, 중국의 팽창
주된 위협	소련	북한	북한·중국
미일 방위협력 가동	① 일본에 무력 공격 ② 극동 유사사태	① 평상시 ② 일본에 무력 공격 ③ 일본 주변 유사사태	① 평상시 ②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상황 ③ 일본이 군사적 외침을 받는 상황 ④ 미국과 다른 나라가 군사적 외침을 받는 상황 ⑤ 일본 내 대규모 재해발생 상황
자위대 활동범위	'일본 유사사태'에 한정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로 확대	지역 구분 없이 전 세계로 확대
주변국과 협조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지역의 다른 동맹국(한국 등)과 정보수집, 후방 지원의 내용에 대해 다국 간 안전보장과 방위 협력을 추진

출처: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p. 92.

둘째, 미일 양국은 ‘중국견제’라는 공동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가이드라인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중국위협’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양국은 ‘그레이존(Gray Zone: 어느 세력권에 속하는 지 불분명한 중간지대) 사태’ 시 양국의 협력 방안을 포함시켰고 이는 중국의 도서(島嶼) 점령과 같은 공세적 군사 활동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sup>80)</sup> 이는 과거의 미일동맹이 주된 위협으로 냉전기 ‘소련’, 탈냉전기 ‘북한’을 언급한 것과는 달리 ‘중국’의 부상을 양국 공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sup>80)</sup> 이기태·김두승, 위의 책, p. 39.

실제로 2015년 11월 24일 미국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 태평양사령관과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양국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 근처로 미국 군함이 항해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sup>81)</sup> 또한 2016년 6월 15일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도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훈련은 미국, 일본, 인도 3개국이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의 훈련으로서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sup>82)</sup>

셋째, 2015년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발생 시 대처'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극도로 긴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2017년 3월 7일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구축함, 보급함 등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보위함이 함께 양국 해군의 전술 및 통신운용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이외에 최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미일 양국은 이 훈련을 통해 미일동맹의 공고함과 대북·대중 역지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sup>83)</sup>

<sup>81)</sup> VOA, 2015.11.26., <<https://www.voakorea.com/a/3073836.html>> (검색일: 2017.10.23.).

<sup>82)</sup> 『뉴시스』, 2016.06.1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23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233)> (검색일: 2017.10.23.).

넷째, 미국과 일본 양국은 동맹의 강화를 통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일 양국은 지속적인 안보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주일미군 및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정기적 협의체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 방위협력 소위원회(Subcommittee for Defense Cooperation: SDC), 공동계획검토위원회(Bilateral Planning Committee: BPC) 등을 통해 양국의 '공동작전계획' 및 '상호협력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일 양국은 2015년 4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평시 양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조정 매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제도화하고 기존 안보협력 이외에 우주에 관한 자산·정보·기술협력, 사이버 공동 감시,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분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2015년 11월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평시상황에서의 일체적 운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양국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동맹조정그룹'을 설치하고 안보에 있어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맹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하였다.<sup>84)</sup>

다섯째,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다자주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1년 미국, 일본, 호주가 창설한 3자 전략 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는 3개국 간의 합동군사능력을 확대·발전시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호주와의 군사안보 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동아시아 지역에

<sup>83)</sup> 『연합뉴스』, 2017.03.10.,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검색일: 2017.10.23.).

<sup>84)</sup> 『문화일보』, 2015.11.0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04011071803019001>> (검색일: 2017.09.24.).

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일종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일본이 3자 전략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군사적 역할 확대를 함에 있어서 호주와의 안보협력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신을 반감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

미국이 3자 전략대화에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본의 군사 활동영역과 운용능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전략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게끔 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은 3자 전략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호주와의 상호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15년 11월 22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니카타니 겐 방위상은 호주의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Marise A. Payne) 국방장관과 2+2회의를 갖고 일본과 호주와의 협력관계 증진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미국 3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들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일방적 군사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호주 외무, 국방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위대의 역할 강화에 지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sup>85)</sup> 일본의 적극적인 호주와의 안보협력 의지는 격년 단위로 열리는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탈리스먼 세이버(Talisman Sabre)’에 2015년부터 참여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

---

<sup>85)</sup> 『연합뉴스』, 2015.11.23.,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 (검색일: 2017.10.23.).

## 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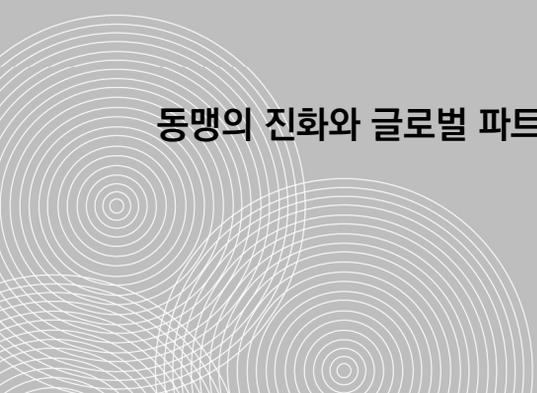
1952년 미일안보조약 체결로 출범한 미일동맹은 지속적으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와 양국 간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1978년, 1997년, 2015년 세 차례의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기존 단순한 쌍무적 군사동맹 관계에서 비전통영역에서까지의 협력확대를 통해 미일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일동맹 강화 과정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 하에 일본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제한을 둔 헌법 제9조에 대해 재해석을 내림으로서 일본 정계가 오랫동안 추진하던 ‘보통국가’라는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국과 일본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서 기인한다. 우선 미국은 미일동맹이라는 틀(framework) 안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높여 최근 국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좁게는 동아시아 지역, 넓게는 세계 패권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패권경쟁국으로서 중국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궁극적인 목표인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미일동맹 강화라는 ‘그늘’ 아래에서 진행함으로써 보수·우경화되어가고 있는 일본 국내사회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주변국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양국은 군사·안보 협력 범위를 일본 주변지역에서 세계지역으로까지 확대, 동맹의 일체화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조정 매커니즘’을 설치, 양국 간 안보협력 범주 확대, 양국 간 양자동맹 협력 구도를 다자동맹 협력구도로 확대하는 노력을 견주하고 있다.

# IV. 미호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박재적(한국외국어대학교)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1. 미호동맹의 전개

‘미국·호주·뉴질랜드 동맹(The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ANZUS)’은 ‘일본과의 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 미국·필리핀 동맹, 미국·일본 동맹과 함께 거의 동시에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되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본토 점령, 일본 공산당의 팽창,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 필리핀 루손 중부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추동된 농민 봉기, 동남아에서 자생적인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 등 공산주의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 기반을 구비하고 있던 일본을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데 있어 거점이 되는 독립국으로 재건시키려 하였다. 일본을 주권국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동맹국들이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 기간 필리핀 지역을 점령하였고 호주 북부지역을 폭격하였던 바, 필리핀과 호주 모두에게 일본은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미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수동적이었던 필리핀과 호주를 설득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의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미국·필리핀 동맹과 호주·뉴질랜드·미국 간 삼각동맹을 체결해야만 했다. 한편,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우려하여 일본에게 전쟁 및 군대보유의 금지를 요구하였고, 일본은 이를 수용하며 미국으로부터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안보 공약을 제공 받게 되었다.

냉전 초기 미국 아태지역 안보전략 구도의 일부로 태동한 미국·호주·뉴질랜드 간 삼각 동맹은 1980년대 중반 뉴질랜드가 삼각동맹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된 이래, 양자 동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노동당(The New Zealand Labour Party)’의 1984년 총선 승리로 수상이 된 데이비드 랭이(David Lange)는 총선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미국 잠수함의 기항조건으로 핵무기 탑재 및 핵연료 추진

여부 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반핵 및 반미 정서를 고려하여 미국은 뉴질랜드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결국 뉴질랜드가 미국 전함 ‘뷰캐넌’의 입항을 불허함으로써 양국 간 외교마찰이 불거졌고, 미국은 삼자동맹에서 뉴질랜드를 사실상(de facto) 축출하였다. 비록 뉴질랜드가 아직도 법률적(de jure)으로는 삼자동맹의 구성국이나, 미국은 1985년경부터 뉴질랜드에 대한 동맹차원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호주·뉴질랜드 간 삼자 동맹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미국과 호주 간 양자 동맹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호주 동맹(이하 미호동맹) 체결의 기반이 되었던 일본에 대한 공동위협 인식은 일본이 빠르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에 순응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냉전 기간 미호동맹은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아·태지역에서 구축한 이른바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체제 (hub and spoke alliance system)’의 남방 축으로 기능하였다. 양국은 공동 위성 정보 수집 기지를 호주의 노스웨스트 케이프(Northwest Cape, 1963년), 파인갭(Pine Gap, 1966년), 누룽가(Nurrungar, 1969년)에 설치·운영하였다. 동 기지들을 통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을 투사하는 데 있어 주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sup>86)</sup> 호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정보협력체인 ‘다섯 개의 눈(five eyes)’에 더해, 미호동맹 차원의 정보 공유로 인해 미국의 최고급 군사 전략 정보 및 자산에 대다수의 국가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냉전의 종식 후, 미호동맹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통동맹이론에 의하면 동맹국들 간의 공동의 위협이나 위협인식이 사라지면 동맹은 해체

<sup>86)</sup> 파인갭의 역할에 관해서는 Demond Ball, “The Strategic Ess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5, no. 2 (2001), pp. 235~248 참조.

된다.<sup>87)</sup> 미호동맹의 경우 양국이 냉전 기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였던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존재이성(Raison d'être)’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 초반 미국이 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수출진흥프로그램(Export Enhancement Program)’ 등으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양국의 안보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1983년에 집권한 호주 노동당이 자주국방과 ‘아시아 우선정책(Asia-first policy)’에 역점을 두었고, 미국에서도 ‘고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다. 1994년 호주 국방백서는 호주 영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의지와 군사력을 구비한 국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호주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명시했는데,<sup>88)</sup> 일부 학계와 정책 집단에서 그와 같은 안보 환경에서 미호동맹이 존속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호주의 보수정당인 자유당이 국민당과의 연립으로 집권한 이후 전통동맹이론의 예상과 달리, 미호동맹이 정체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복원(resilience)’되었다. 1996년 ‘시드니 선언(The Sydney Statement)’을 기점으로 미호동맹이 공고화되어가고 있고, 현재 미·호 동맹은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군사동맹 중 가장 응집력(cohesion)이 높은 동맹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차원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바, 호주 말콤 턴불(Malcolm B. Turnbull) 총리는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호동맹 조약을 발동하여 미국을 방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sup>89)</sup>

그렇다면, 미국과 호주가 상호 공유하는 명백한 위협 또는 위협인식이

<sup>87)</sup> Stephen,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Spring 1997), pp. 156~179.

<sup>88)</sup>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Defence White Paper 1994*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4), p. 22.

<sup>89)</sup> *The Sydney Morning Herald*, August 11, 2017.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미호동맹을 존속 및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우선 미국과 호주가 각각 미호동맹을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을 검토한다.

## 2. 미호동맹의 진화와 안보이익의 변화

미호동맹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주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제이다. 동남아시아는 해상수송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제2전선이다. 아울러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은 동 지역에서 전략적 기동성을 구비한 미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중국의 ‘반 접근·지역 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에 대비한 군사력의 투사(power projection)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비록 호주가 동남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남아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미국의 동남아 지역 어느 동맹국 및 안보 협력국보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호동맹은 미국이 동남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용한 자산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호주는 미국이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공·해전(Air/Sea Battle)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미국을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호주 북부 다윈 지역에 미국 해병대를 순환배치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분쟁 시 개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2012년 미 해병대원 250명의 6개월간 순환배치가 시작된 이래 양국은 호주 ‘로버트슨 바락스(Robertson Barracks)’ 해군기지에 매년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 해병 공·기동부대(Marine Air Ground Task Force) 병력을 2,500명 수준을 목표로 꾸준히 증원시켜 오고 있다. 또한 배치된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활주로 등도 건설하고 있다. 로버트슨 바락스 기지에는 호주 1여단 등 호주의 주요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바, 다윈 지역은 양국 간 원활한 군사훈련을 위한 최적지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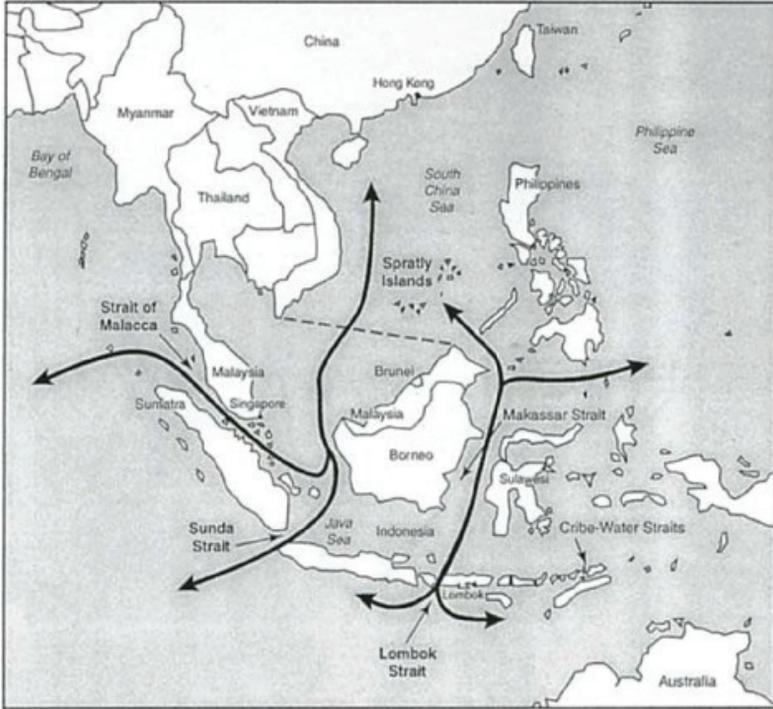
미국이 호주 북부지역에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는 것은 남중국해, 인도양, 말라카해협이 미·중의 잠정적 대립지역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원유 수입의 절반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조달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과 중국 간 분쟁으로 인해 미군이 말라카해협을 봉쇄하면 중국은 순다(Sunda) 해협과 롬복(Lombok) 해협을 통과하여 중국의 남부지역에 도달하는 수송로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양 해협이 호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1966년부터 영국으로부터 조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에서 운영 중인 공군 기지는 남중국해로부터 인도차이나 반도로 연결되는 해양수송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바,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다윈지역의 미 해병대 순환 기지가 미국이 신속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효율적 거점이 될 수 있다.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해전 전략의 주된 목적이 중국의 ‘제1열도선(first island chain)’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면, 미국이 말라카해협을 봉쇄하고 순다(Sunda) 해협과 롬복(Lombok) 해협에서 중국과 대처할 시 호주가 미국 공·해전의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양국이 2005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탈리스먼 세이버(Talisman Sabre)’ 연합 군사훈련 등을 통해 호주 군에게 세계 최강인 자국 군대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이 호주의 파인갭(pine gap)에서 군사정보 및 첩보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바,<sup>90)</sup> 미국은 호주와 지구상 대다

<sup>90)</sup> 냉전 기간 양국이 누룽가(Nurrungar)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위성기지는 1999년에 폐쇄되었고, 노스웨스트 케이프(Northwest Cape) 기지는 같은 해에 미국과 호주의 공동운영에서 호주군 독자운영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

수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림 IV-1 말라카, 순다, 롬복 해협



출처: Perry Scope, "Why China Wants the SCS Badly," *Global BALITA*, March 14, 2016, <<http://globalbalita.com/2016/03/14/why-china-wants-the-scs-badly/>> (검색일: 2017.12.01.).

한편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호주의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호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홍콩, 미국 순이기 때문에 아·태지역의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호주는 교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및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호주가 지향하는 항해의 자유, 법치주의, 시장경제, 공평무역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발전·유지시켜온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에 녹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호주는 나토가 주도했던 코소보 사태(1999년)나 리비아 내전(2011년) 등 몇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이 1941년 이래 개입한 주요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지원하였다. 일례로 호주는 중국이 대만해협 근처로 동풍(東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촉발된 1996년 대만 위기 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군함을 대만해협에 급파하였다.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개입하기를 꺼렸던 것과 대비된다. 또한 호주는 알카에다의 미국에 대한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이 대테러전을 개시하자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전쟁 개시부터 미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호주는 2003년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도, 전쟁 초기부터 미국을 지원한 5개국 중 하나였다. 사실 호주의 대 이라크 전 참전결정은 호주 국내에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호주 하워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호동맹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파병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호주의 전폭적 지원을 2006년에 발간된 『국방 4년 주기 보고서』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한 영국 및 호주와의 특별한 관계를 높이 중시한다. 이들 국가들의 밀접한 군사협력은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과 설정하고자 하는 협력의 깊이와 범위에 있어 하나의 표본이다.”<sup>91)</sup> 또한 미국은 같은 해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호동맹이 전 세계적인 범위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명시하였다.<sup>92)</sup>

<sup>91)</sup>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Pape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6), pp. 6~7.

<sup>92)</sup> U.S.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호주의 입장에서 미호동맹은 미국·필리핀 동맹 및 미국·태국 동맹과 함께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미국은 호주와의 군사훈련, ‘코브라 골드(Cobra Gold)’ 등 태국과의 군사훈련, ‘발리카탄(Balikatan)’ 등 필리핀과의 군사훈련을 다자의 형태로 확대시키면서 역내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미국이 호주, 필리핀, 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미국 군대가 동남아시아에서 비록 비전통안보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동맹국 외의 역내국가와 군사적 접촉의 폭을 넓히는 데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호동맹은 호주가 역내 제반 안보 이슈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역내 국가 중 일부는 종종 호주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 보안관(deputy sheriff)’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 일부에서는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나치게 밀착시키면, 호주가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하지 않는다면, 미호동맹은 호주의 안보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낮은 단계에서의 ‘균형(balancing)’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 미호동맹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의 밀접한 안보 협력관계로 인해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우려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관계를 증진시켜 올 수 있었다. 호주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안보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높은 수준의 안보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미호동맹이 호주의 안보 위상을 높여준 대표적인 예로는 호주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가입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

---

*Americ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6), p. 40.

의 출범 당시 중국은 동 회의를 회원국 자격을 동아시아 국가에게만 부여하고자 하였다. ‘배타적 동아시아 지역주의(exclusive East Asian regionalism)’에 입각해 미국의 가입을 봉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것을 우려한 일본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의도를 무마시키기 위해, 미국과 밀접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호주는 아세안이 제시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ASEAN’s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에 서명하고 2005년 12월에 인도 및 뉴질랜드와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회원국이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미호동맹은 ‘특정위협(specific threat)’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라는 전통적 동맹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 질서의 유지 및 전향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미호동맹의 범주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점차 동남아, 동아시아, 아·태지역, 인도·태평양(Indo-Pacific) 및 범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호주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양국 ‘국방 및 외교장관의 2+2 회담(Australia-United States Ministerial Consultations: AUSMIN)’의 공동선언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양국은 매년 동 선언문에서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제반 이슈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9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양국은 미호동맹을 무역 및 개발 분야까지 포괄하는 다원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사이버 영역(cyber space)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7년 회담에서는 양국이 인도·태평양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다.<sup>93)</sup> 이렇듯 미국과 호주는 미호동맹의 주된 역할을 아·태

<sup>93)</sup> AUMIN 공동성명 원문은 호주 외교부 웹페이지 “AUSMIN-Australia-United States Ministerial Consultations,” <<http://dfat.gov.au/geo/united-states-of-america/ausmin/Pages/ausmin-australia-united-states-ministerial-consultations.aspx>> 참조.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평화, 안정, 번영에서 찾고 있다. 이는 역내 안정과 평화가 호주의 국가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호주의 전략적 이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호주가 미호동맹의 범주를 아·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및 범지구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호주 내부에서 전개되어 온 주요한 논의를 검토한다.

### 3.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호주 내부 동학

미호동맹의 역할 및 범주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호주 국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동맹의 지역화 또는 글로벌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있었으며, 그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주요한 쟁점은 (1) 전진방위 대 본토방위, (2) 중국 위협론 대 중국 기회론, (3) 미국의 대테러전에 대한 호주의 협력 수준이다.

우선 전진방위 대 본토방위의 논쟁을 미호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맥락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의 국방정책 교리(doctrine)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호주가 국방정책의 주안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전진방위(forward defense)’와 ‘본토방위(defense of Australia)’ 개념이 대립하여 왔다. 전진방위를 선호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안보 및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호주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호주가 역내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본토방위를 선호하는 정책결정자들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호주 본토를 방어하는 데 호주 국방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전진방위는 미호동맹의 글로벌화에 좀 더 부합한 개념이고, 본토방위는 호주의 자주 국방력 증강에 좀 더 부합한 개념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진방위’ 개념은 호주의 안보가 동남아를 위시한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전통적으

로 영국,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미호동맹의 맥락에서 발전되어 왔다. 동 개념은 2차 대전 후 소련,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한 공산주의의 확장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태동하였다. 예를 들자면, 호주는 1960년 후반 말레이시아에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이는 호주 본토 방위 가 아닌 동남아시아 안보질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아울러 호주는 미국이 개입한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이에 반해 ‘본토방위’ 개념은 호주 북부에 위치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해협(sea-air gap)을 통한 호주 본토 침공을 저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동 개념은 미국의 팜 독트린(1969년), 영국군의 싱가포르 철수(1971년), 미국의 베트남 철군 이후 호주가 자주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맥락에서 발전되었다.<sup>94)</sup> 특히, 호주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국내적 비판과 맞물리면서 1972년 이래 ‘전진방위’의 대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986년 『폴 디프 보고서(Paul Dibb Report)』, 1987년 및 1994년 국방백서에서 호주의 주요 군사전략으로 공식화되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전진방위’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호주는 육군, 해군, 공군 중 신속한 파병 등을 목적으로 한 육군력 증강에 진력한 반면, ‘본토방위’ 개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력 증강을 우선시했다. 호주의 주요 양대 정당 중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본토방위’를 우선시하였고, 자유당은 ‘전진방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자유당은 ‘아시아 우선 정책(Asia First Policy)’보다는 미호동맹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육군력 강화에 진력한 반면, 노동당은 미호동맹보다 ‘아시아 우선 정책’을 더욱 중시하면서 해군·공군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sup>95)</sup>

<sup>94)</sup>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Australian Defence*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76), pp. 10~11.

<sup>95)</sup> 자유당이 ‘아시아 우선 정책’을 등한시 했다거나, 노동당이 미호동맹을 경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의 집권당이 노동당이든 자유당이든, 호주는 ‘아시아 우

자유당이 집권했던 1996년 이래 호주는 ‘전진방위’에 입각해 미호동맹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동티모르 사태 시 해·공군이 주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데 비해 육군은 보병 파급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였는데, 호주 정부 내에서 ‘전진방위’ 개념에 입각한 신속 기동능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노동당이 집권한 2007년부터 ‘본토방위’ 기조가 부활하였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테러 집단이 준동하면서 ‘본토방위’ 기조 속에서도 노동당 정부는 호주군의 신속한 파병 능력 배양을 추진하였다. 호주의 방어선이 2,700여만 m<sup>2</sup>(지구 면적의 5%)임을 감안할 때 테러리스트 등의 공격에서 광대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동능력을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근에는 ‘전진방위’와 ‘본토방위’ 개념이 집권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혼재되어 국방정책에 표출되고 있다. 일례로 줄리아 길라드(Julia E. Gillard) 수상 하 노동당 집권 시 호주는 호주 다윈 지역에 미국 해병대의 순환배치를 결정하였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남중국해 분쟁이 ‘본토방위’와 ‘전진방위’ 논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호주의 미 해병대 순환배치 결정은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항해의 자유가 호주의 경제 이익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전진방위’와 맥을 같이 하지만, 최근 동 지역에서 중국이 인공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토방위’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향후 인공섬에 전략 항공자산을 배치하면 호주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남태평양 지역 밖으로 미호동맹의 역할 및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전진방위’ 뿐만 아니라 ‘본토방위’ 개념에서도 부합하게 되었다. 즉, 지역 차원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호동맹 파트너십 강화가 초당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

선 정책’과 미호동맹을 항시 동시에 중시하여 왔다.

호주 내에서 미호동맹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논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미호동맹으로 상징되는 미국과의 안보관계와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상징되는 아시아에 대한 관여(engagement) 사이에서 호주의 정책적 입장이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그 파장에 대한 호주 내부에서의 인식차가 있다.

중국의 부상이 호주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과 호주 간의 상호보안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부상은 호주에게 경제적 이득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조작되거나 과장된 중국 위협론에 근거해 호주가 국방비를 증액하거나 미호동맹을 지나치게 강화할 필요가 없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 호주의 주요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부재하므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sup>96)</sup> 셋째, 중국의 부상이 호주의 주요 안보이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호주가 중국과 경제관계를 증진시켜가고 있지만, 그러한 경제관계가 미국과의 안보관계에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

호주 국민은 위의 세 가지 시각 중 특정 시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미호동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호주의 로우이(Lowy) 연구소가 수행한 2017년 여론조사에 의하면,<sup>97)</sup> 호주인의 45%가 타 국가와의 관계 중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45%와 오차범위에 있는 43%가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한편 호주인의 46%가 중국이 향후 20년 안에 호주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

<sup>96)</sup> Hugh White, *The China Choice: Why We Should Share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10.

<sup>97)</sup> Lowy Institute, “2017 Lowy Institute Poll,”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2017-lowy-institute-poll>) (검색일 2017.12.01.).

있지만, 13%만이 현재의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호주인의 79%가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34%만이 중국이 역내 국가와의 영토분쟁 지역에서 군사 충돌을 일으킬 때 호주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호주가 항해의 자유를 위해서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 데에는 68%가 찬성한다. 위의 일면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호주 국민이 아직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뚜렷한 정향을 정립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 정부 내 정책 서클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관한 위 세 가지 시각 중 세 번째가 주류를 차지한다. 물론 휴 화이트(Hugh White) 호주 국립대 교수를 위시한 일련의 안보 전문가들이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각을 설파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일찍이 중국이 호주 철강석 생산업체인 리오 틴토(Rio Tinto)사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을 간첩 행위로 체포(2009.07)한 것이 호주 정책서클에서 중국위협론의 확산에 일조한 바 있다. 2010년 언론에 보도된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하면 빈 러드(Kevin Rudd) 수상은 재임 시 미국 힐러리(Hillary D. R. Clinton) 국무장관에게 중국의 무력 공격에 대비하라고 발언하였다. 2017년 3월 4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한 데니스 리처드슨(Dennis Richardson) 국방차관은 미국을 우방으로, 중국을 친구로 규정하면서, 호주 내에 중국 스파이가 많다고 언급하였다.<sup>98)</sup> 호주정부가 호주 북부 인프라 개발을 위한 50억 호주 달러 기금(NAIF) 조성에 중국이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도 호주 내 중국위협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99)</sup> 호주 정책 서클에서 중국의 경제적·군사

<sup>98)</sup> "China Has Been 'Spying in Australia,'" *The Australian*, May 12, 2017,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defence/china-spying-in-australia-dennis-richardson-says/news-story/84b92773d886d02c42636db75981c38f>> (검색일: 2017.12.01.).

<sup>99)</sup> *Financial Times*, March 23, 2017.

적 부상이 향후 호주의 주요 안보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헤징(hedging)의 차원에서 미호동맹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호주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하자 호주가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였고, 미국과 이라크와의 2003년 전쟁에도 호주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호주는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 이슬람국가(IS) 국제연대(Global Coalition to Counter ISIL)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10월부터 시리아 공중폭격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는 FA-18 전투기로 시리아에 대한 폭격을 확대하였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 이슬람국가 자금그룹(Counter-ISIL Finance Group)의 회원국이며, 동 그룹의 외국인 용병 테러 분과(Foreign Fighter Terrorist sub group)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다.<sup>100)</sup> 호주는 미국과 미호 장관급 2+2 회담(Australia-United States Ministerial Consultation) 등 다양한 기제를 통해 테러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 일각에서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으로 인해 호주가 불필요하게 역내 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국제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호주가 미국의 ‘부보안관(Deputy Sheriff)’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에 기인한다.<sup>101)</sup>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호주 대사관 테러(2004년)와 발리 폭탄 테러(2005년)의 주범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

---

<sup>100)</sup> US Department of States, “Country Report on Terrorism 2015,” <<https://www.state.gov/j/ct/rls/crt/2015/>> (검색일: 2017.12.01.).

<sup>101)</sup> Fred Brenchley, “The Howard Defence Doctrine,” *The Bulletin*, no. 117 (September 28, 1999), pp. 22~24.

고 있는 테러전에 동참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와 같은 논란을 촉발시켰다. 최근에는 2017년 6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발생한 총기 인질극으로 인해 시민 1명과 인질범 1명이 사망하였는데,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성명을 통해 동 테러가 호주의 미국 주도 연합군 합류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관계로 인해 호주가 국제 테러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1960년 대 호주 중부 사막지인 ‘파인갭(Pine Gap)’에 설치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미호 공동 첩보시설이 소련의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냉전 시기의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말콤 프레이저(Malcolm Fraser) 호주 수상, 마크 비손(Marc Beeson) 교수 등은 호주의 미국 대테러전에 대한 협조로 인해 호주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주 정책 서클의 대다수는 호주의 미국 대테러전 협조가 미호 동맹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동맹에 대한 투자(insurance for alliance)’ 또는 무형의 ‘안보부담공유(burden sharing)’라는 점에 동의한다. 미국이 대테러전 협조를 동맹에 대한 ‘충실도(loyalty)’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는 상황에서 비대칭 동맹의 약소 동맹국인 호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미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로우이 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호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0%)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9%에 불과하다. 오히려 응답자의 77%가 미호동맹이 매우 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6년 여론조사 결과인 71%보다 6% 더 증가한 것이다.<sup>102)</sup>

지금까지 호주 내부에서 미호동맹의 지역화 또는 글로벌화를 둘러싼 주요한 논쟁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종합하자면, 호주 국내에서 미호동

---

<sup>102)</sup> Lowy Institute, “2017 Lowy Institute Poll.”

맹의 범주와 역할을 호주 방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태지역 및 범지구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동인은 (1) 호주가 선호하는 자유무역, 항해의 자유, 법치주의 등이 내재되어 있는 미국주도 질서를 수호하는 데 미호동맹이 기여한다는 ‘질서 중심적(order-centric)’ 동맹관과 (2)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헤징(hedging)’이다.<sup>103)</sup> 호주의 정책 결정자들이 ‘전진방위’ 또는 ‘본토방위’ 중 어느 개념을 중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호동맹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물론 미호동맹의 역할과 범위 확대가 호주 국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 테러전에 대한 호주의 적극적 협력으로 호주가 불필요하게 국제 테러의 대상국가가 되는 불이익을 지적한다. 그러나 호주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여 미호동맹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데, 동맹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가 ‘동맹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금(insurance for alliance)’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다수의 국민과 정책 엘리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4.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현황과 전망

양국이 국방협력과 함께 안보협력을 증진시켜나가면서 미호동맹이 ‘지역화’ 및 ‘글로벌’화 되고 있다. 국방협력은 특정 국가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안보협력은 국방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issue)’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한다.<sup>104)</sup> 그런데 탈냉전기 테러, 사이버

<sup>103)</sup> ‘질서 중심적’ 동맹관에 대해서는 Park, Jae Jeok, “The persistence of the US-led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an order insurance explan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3, no. 3 (2013) 참조.

<sup>104)</sup> J. N. Mak, “Malaysian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Coming out of the Closet,” in *Asia-Pacific Security Cooperation: National Interests and Regional Order* eds. See Seng Tan and Amitav Acharya (New York: Armonk, 2014), p. 128.

안보와 같은 ‘비전통안보’ 의제들이 ‘전통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비전통안보’와 ‘전통안보’ 영역의 구분이 점증적으로 희미해지고 있다.

호주와 같이 영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보환경에서는 안보협력이 국방협력을 추동한다. 비전통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은 양자보다는 소다자 또는 다자의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다수의 비전통안보 의제가 세 국가 이상 다수 국가가 협력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일례로 ‘초국가범죄(transnational crime)’의 경우, 범죄자들이 다국적이거나 범죄자가 다수의 국가를 경유하여 도주하곤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소다자 안보협력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런데 소다자 안보협력은 기존의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중심축과 바퀴살’ 안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안보협력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은 양자의 측면에서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동시에 역내 비전통안보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미국이 구축해 놓은 안보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에 기반을 둔 미국·호주·일본 간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미호동맹이 역할과 범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현황을 양국의 양자 간 국방협력 및 소다자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해양국방협력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미호동맹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양국방협력과 관련, 호주는 ‘본토방위(defence of Australia)’ 전략에 입각해 가상의 적이 해상을 통해 호주를 침략할 경우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국방력 증강에 역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육군 및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력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바, 호주는 영공을 통한 공격까지 대비하는 ‘이중저지(dual-denial)’ 태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호주는 미국이 군사 자산을 호주에 전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가 2011년 호주 다윈 지역에 미국 해병대의 순환배치를 합의한 이래 2017년 현재 미 해병 1500여 명이 동 지역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호주 영토 내에 영구적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미군이 호주 근접지역에서 작전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전함, 항공기, 병력의 호주 군사 시설 이용은 허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호주가 자국령인 서북부 인도양 상의 ‘코코스 킬링 군도(The Cocos Keeling Islands)’를 미국 장거리 무인 정찰기의 발진 기지로 허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호주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sup>105)</sup> 또한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호주 퍼스(Perth)시에 위치한 해군 기지를 미군 핵항모 주둔의 적격지로 명시한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sup>106)</sup> 미국과 호주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탈리즈만 세이버 군사훈련은 양국 간 긴밀한 국방협력을 상징한다. 2017년 6월에 7차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동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만 3천 명의 병력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호주는 미호 군사협력의 강화를 인해 호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각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 해병 순환 배치는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해징의 측면이 크지만, 아태지역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국으로의 지나친 경도는 호주의 안보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향후 중국의 항공전투 능력이 향상되면,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중국이 동남아시아 영토분쟁 지역에 건설해 놓은 인공 활주로에서 중간 급유 없이 호주

<sup>105)</sup> Craig Whitlock, “Australia May Host US Drones at Cocos,” *The Sydney Morning Herald*, March 28, 2012.

<sup>106)</sup> Nick O’Malley and Dylan Welch, “US Sets Sights on Perth Naval Base,” *The Sydney Morning Herald*, August 2, 2012.

까지 날아가 호주를 폭격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의 공·해 전 시, 호주 내 미군 시설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냉전 시에도 호주 내 미호 공동 군사시설들이 소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호주는 소련과 지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재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호주의 최대 수출국인 바, 호주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호주는 미호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중국과 최고 책임자급 안보전략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호주가 중국을 초청하여 미국과 함께 호주 영토에서 삼자 공동 군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IV-2 다윈, 퍼스, 코코스 아일랜드



출처: Patrick O'Connor, "US and Australia Prepare Military Build Up in Indian Ocean," March 29, 2012, World Socialist Web Site, <<https://www.wsws.org/en/articles/2012/03/coco-m29.html>> (검색일: 2017.12.01).

한편 미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 상호 협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양국은 2015년 아·태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있어 호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sup>107)</sup> 호주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호주가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역제를 위해 미국, 일본, 한국에 합류하여 통합된 영공 및 미사일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sup>108)</sup> 미국은 2016년 4월 호주에 대한 12억 달러 상당의 항공 방어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가 냉전 기간부터 공동으로 군사 위성 정보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양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의 토대는 이미 상당한 높은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역내에서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턴불 수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sup>109)</sup>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하원의 맥 손베리(Mac Thornberry) 군사위원장은 2017년 7월 북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한·미·일·호 4개국 합동 훈련을 위한 비용 1500만 불이 포함된 「아태지역 방위지출법」을 발의하였는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한·미·일 훈련에 호주를 초청하게 될 것이다.<sup>110)</sup>

<sup>107)</sup> John Garnaut, “US Draws Warships Into Military Web,” *The Sydney Morning Herald*, August 12, 2014.

<sup>108)</sup> <<http://www.defence.gov.au/WhitePaper/Docs/2016-Defence-White-Paper.pdf>> (검색일: 2017.12.01.).

<sup>109)</sup> “턴불 호주 총리 “북한 공격 시 미국 지원할 것”, 『아시아 경제』, 2017.08.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2017081115053713080>> (검색일: 2017.12.01.).

<sup>110)</sup> *The Sydney Morning Herald*, June 30, 2017.

그런데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하였고, 2016년 미국과 한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합의를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 구축의 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미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와 미일·호 미사일방어 체제를 각각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일·호 미사일방어 체제까지 완성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안보협력이다. 미국과 호주는 전통안보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안보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협력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주요 계기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후 국제사회의 재난구호 공조이다. 당시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합의 노력에 미국, 일본, 호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일본과 호주가 싱가포르와 함께 2007년 미국과 인도의 연례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역내 비전통안보 의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안보협력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중심의 소 다자 안보협력을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주도 소 다자 안보협력이 비전통안보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할지라도 협력의 단계가 (1) 정기성을 띠거나, (2)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높아지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신뢰가 전통안보 영역으로 용이하게 전이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비전통안보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비전통안보 의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다. 호주는 필리핀에서 P-3 오리온 정찰기 2대를 운용하는 등 필리핀의 '해양능력배양(maritime capacity building)'에 기여하고 있다.<sup>111)</sup> 또한

호주는 2017년 9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필리핀 군대가 필리핀 남부 도시 마라위(Marawi) 지역에서 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에 추동된 테러요인들을 소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규모의 군대를 필리핀에 파병하여 필리핀 군대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sup>112)</sup> 호주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의 해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2017년 8월 베트남을 방문한 호주 페인 국방장관은 베트남 응오 쑤언 린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의 해양 방위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호주가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sup>113)</sup> 호주가 지난 20여 년간 남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의 태평양 순찰선 프로그램(Australia’s Pacific Patrol Boat Program: PPBP)’을 성공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바, 호주는 남태평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역내국가의 ‘해양능력배양’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미국과 일본 또한 호주와 유사하게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공적개발원조 형태로 베트남에 정찰선 6척을 제공해왔던 일본이 2017년 1월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신형 정찰선 6척을 추가로 베트남에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sup>114)</sup> 호주, 미국, 일본이 각각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개별적 ‘해양능력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삼국이 각국의 정책을 조정해

<sup>111)</sup> Prashanth Parameswaran, “New Australia Military Terror Aid For the Philippines?,” *The Diplomat*, August 31, 2017, <<http://thediplomat.com/2017/08/new-australia-military-terror-aid-for-the-philippines/>> (검색일: 2017.12.01.).

<sup>112)</sup> Indo-Asia-Pacific Defense Forum, “Australia to aid Philippines in Marawi terror battle,” September 23, 2017, <<http://apdf-magazine.com/australia-to-aid-philippines-in-marawi-terror-battle/>> (검색일: 2017.12.01.).

<sup>113)</sup> “베트남·호주, 방위협력 강화…남중국해 ‘반중 연대’ 꾀걸음,” 『연합뉴스』, 2017.08.25.

<sup>114)</sup> Ankit Panda, “Japan Pledges 6 New Patrol Boats for Vietnam Coast Guard,” *The Diplomat*, January 17, 2017.

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호주, 미국, 일본의 해양협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삼국이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증진시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인 영토분쟁은 없다. 그러나 중국이 2016년 6월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나파나제도 인근 해역의 상당부분이 중국이 자국령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9단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나파나제도 인근 해역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인데, 중국 본토에서 약 2,000km (1,250마일)나 떨어져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기간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적극적이다. 일례로 일본은 빠뎀반 신항 개발 사업을 수주하였고, 아베 수상 주도로 인도네시아의 양대 도시인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남중국해 영역에서의 '공동 해양 순찰(joint maritime patrols)'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중 양국의 남중국해 영역에서의 공동 순찰이 동 지역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천명하였고, 2017년 2월 인도네시아 조꼬위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 양국 정상은 해양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7년 3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호주 턴불 총리는 호주가 인도네시아와 공동순찰을 펼칠 계획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호주가 인도네시아와의 해양협력을 강화시키기 원하지만,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여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미국과 함께 인도네시아와의 해양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호주와 미국이 주도하여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함께 코코스 제도에서 '해양 상황 인지(maritime domain awareness)'를 위해 공동으로 무인기를 운영할 가능성을 언론이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안보협력 외연확대를 위해, 미국과 호주는 양국의 안보협력을 일본과의 3자 협력으로 확대해왔다. 삼국의 안보협력을 조율하는 주요한 기제는 3자 전략대화이다. 미국·호주·일본 간의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는 2001년 호주의 제안으로 '삼자 안보 대화(Trilateral Security Dialogue: TSC)'로 시작되었고, 2006년에 장관급 전략 대화로 승격되었다. 삼국은 역내 비전통안보의 제를 전략대화의 주 의제로 채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있다. 삼국 정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정상회담도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 개최되었다. 삼국은 해양안보 등을 의제로 삼국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양자 간 훈련에 제3국이 참관·참여하는 형식으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삼국 모두 광범위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바, 비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삼국 또는 중첩적인 양자 간 군사훈련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적 행위를 공동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더해 전 지구적 차원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연구 등 다양한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삼국은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국 안보협력의 기반은 미국이 호주 및 일본과 맺고 있는 양자 동맹이다. 냉전 기간 동안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은 독자적으로 운용되었다. 즉, 미국은 양 동맹을 연계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과 호주 간의 안보 협력도 미미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후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이 삼자 전략대화를 매개로 연계되면서,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 관계도 증진되고 있다. 2001년 '호주·일본 간 창조적 협력 관계를 위한 시드니 선언(Sydney Declaration for Australia-Japan Creative Partnership)', 2003년 국방 교류 양해각서, 2007년 '호주-일본 안보협력 공동 선언' 그리고 2008년 '안보 양해 각서(defense memorandum)'는 양국 안보협력 관계의 증진을 입증해주는 이정표다.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을 2010년 이래 연례로 개최하고 있고, 2012년에는 군사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였다. 호주가 2014년 일본 영토 내에서 실시된 미·일·호 군사

훈련에 참가하였고, 호주 영토 내에서의 미국과 호주의 군사훈련에 일본이 2015년에 참가하였다. 2017년 현재 호주와 일본이 거의 타결 단계에 있는 상호방문군대협정(SOFA)이 체결되면, 양국 영토 내에서의 군사훈련이 증가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양국은 2010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여 국제 재난 구호,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시 상호 간 물자와 연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7년 1월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여 상호 간에 탄약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본이 2016년 44조원 규모의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실패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양국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과 호주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역내 국가와의 안보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2017년에 개최된 미국과 호주 국방·외교 장관 간 정례 회의에서 양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른 미국의 동맹국 및 안보 협력국과의 관계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미국과 호주는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틀에서 한·미·호 안보협력 관계의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호주와 한국의 안보협력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sup>115)</sup> 양국은 2013년부터 장관급 2+2 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자의 틀 속에서 실시하는 공동 군사훈련에 더해 양자 군사훈련인 ‘해돌이-왈라비 (Haedori-Wallaby)’를 2012년, 2013년, 2016년에 시행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호 간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구원, 영토분쟁,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고려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의 안보협력이 더욱 증진된다면, 한·미·호 안보협력이 한·미·일 안보협력

<sup>115)</sup> Jae Jeok Park,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Bilateral for Minilateral?,” *Pacific Focus*, vol. 31, no. 2 (2016). pp. 177~181.

에 앞서 추동될 수 있다. 2014년 두 차례 개최된 한·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호 삼각 안보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미국과 호주의 정례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의 선언문은 최근 수 년 동안 호주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이 준 동맹의 정도까지 증진되어 있는 바, 한·미·호 안보협력이 추동되면 결국 호주를 매개로 미·일·호 안보협력과의 연계, 궁극적으로 한·미·일·호 안보협력의 태동으로 확장될 잠재성이 농후하다.<sup>116)</sup>

한편 미국과 호주는 일본과 삼자 안보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려 한다. 일례로 삼국은 2017년 5월 베트남과 ‘태평양 파트너십(Pacific-Partnership)’으로 명명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베트남이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점령당했던 바 있고, 미국 및 호주와는 베트남 전쟁 시 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탈냉전기 아태지역 안보협력이 냉전 시대의 ‘영합(zero-sum)’ 논리를 극복하고 있는 방증이다.

미국과 호주가 양자 안보협력을 일본과의 삼자를 넘어 사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데 있어 주요한 대상 국가는 인도다. 미·일·호 ‘삼자 전략대화’를 인도를 포함하는 ‘4자 전략대화(Quad-lateral Strategic Dialogue)’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2007년에 4자 간 안보협력을 제안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한 뒤, 미국과 인도의 정기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에 일본과 호주가 참가하였다. 이후,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간 개별적 양자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4자’의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주목할 것은 최근 미·일·호·인도 간 양자 안보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sup>116)</sup> Hiroyasu Akutsu, “The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US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Toward Synchronisation,” in *China’s Power and Asian Security*, eds. Li Mingjiang and Kalyan M. Kumburi (Abingdon, UK: Routledge, 2015), pp. 265~282.

와 같이 호주와 일본의 안보관계는 유사 동맹관계 수준으로까지 밀착되고 있고, 미 해병대의 호주 순환배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호동맹의 군사적 측면이 강화되었다. 미국·인도 안보협력 또한 증진되고 있다. 인도는 최근 10년간 미국과 60여 차례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어느 역내 국가보다 많은 수이다. 양국은 ‘미국·인도 아시아·태평양·인도양 지역 공동 전략 비전’(2015)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해상안보와 항해·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역내 제3국과 논의체제를 구축하고 대화를 강화한다고 공표하였다. 비록 동 선언에서 제3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을 의미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일본과 인도의 안보협력도 증진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일본·인도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였다.

또한 미·일·호·인도 간 삼자 안보 협력 관계도 증진되고 있다. 미국·인도와의 해상군사 훈련인 말라바(Malabar)에 일본이 간헐적으로 참가한 뒤(2007, 2009, 2014년), 2015년 일·호·인도 간 차관급 3자 회담에서 일본은 ‘말라바’ 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실제로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미일·인도 간 소 다자 전략대화도 2007년에 출범하였다. 비록 1트랙 차원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나, 2011년부터 2트랙 차원에서는 가동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16년 미일·호 간 말라바 군사훈련 직후 인도 해군과 일주일 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주목할 것은 미국과 일본이 4자 전략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공의 공간으로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을 전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일찍이 2007년 아베 수상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된 아시아(broader Asia)’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었다. 미국도 2011년 힐러리 국무장관이 새로운 아·태지역을 일컫는 개념으로 인도·태평양을 언급하였다. 인도를 통해 중

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폐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응하려는 의도였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호주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중국이 인도 주위 국가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통해 인도를 포위하는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경계한다. 향후 중국이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은 인도양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도 반도 주변 국가들의 항구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전략 핵심수함을 동 지역에 출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 일본이 추진하는 ‘4자 전략대화’에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 또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삼자전략대화’를 인도를 포함하는 4자회담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소극적이다. 호주는 미국과 인도 간 정규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에 2007년 한 차례 참가한 이후, 일본과 달리 더 이상 참가한 적이 없다. 그런데 비록 호주가 표면적으로 미·일·호·인도 간 안보협력을 추동시키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인도와의 양자 안보 협력은 증진시키고 있다. 호주와 인도는 ‘안보협력을 위한 프레임 (Framework for Security Cooperation)’을 체결(2014.11)했는데, 동 프레임은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기 해상 군사 훈련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7년 말라바 군사훈련에 호주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나, 인도가 이를 반대하였다. 종합하자면, 미국과 호주의 양자 안보협력은 일본을 포함하는 삼자로 확대되었고, 양국은 협력의 외연을 4자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일본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중국을 고려하여 좀 더 우회적으로 4자 협력에 접근하고 있다.

## 5. 소결

호주 다윈지역 미 해병대 순환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비용 분담 등 미국과 호주가 해결해야 할 동맹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미호동맹의 응집력은 견고하며 양국은 미호동맹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호동맹 유지·발전의 동인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위협과 호주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무역, 항해의 자유, 법치주의 등이 내재된 미국 주도 경제 및 안보 질서의 유지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양국이 미호동맹의 지역차원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최대의 장애는 미국 주도 동맹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이다.

중국은 미호동맹을 위시하여 미국 주도 동맹이 강화되고 동맹 간의 소다자적 연계가 추구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봉쇄에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미국 주도 동맹의 지역화 및 글로벌화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3자 전략대화’에 기반을 둔 미국·일본 동맹과 미호동맹의 연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이 ‘3자 전략대화’를 인도가 포함되는 4자 전략대화로 확대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소규모 나토(little NATO)’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를 통한 소다자 안보협력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태지역에 존재하는 ‘구조적 장애(structural barriers)’를 고려할 때, 소다자주의가 아·태지역에서 효율적인 다자 안보 협력체를 추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이러한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해온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군사적 측면인 미국 주도 동맹 강화와 ‘안보 네트워크(security network)’ 구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부상이 초래

할 불확실성에 대한 헤징(hedging) 내지 보험(insurance)을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이 동맹국 및 우호국가와 구축해온 ‘안보 네트워크(security network)’는 아·태지역 안보 이슈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저비용·고효율이다. 미국과 네트워크 구성국과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division of labor)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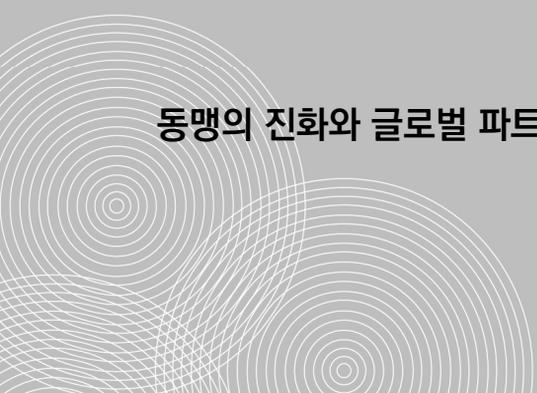
따라서 미국과 호주가 미호동맹의 지역차원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그 수준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호주의 초청으로 2014년 이래 미호 간의 군사교육 훈련인 ‘코와리(Kowari)’에 중국이 참여하는 등, 호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같이 참여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을 추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의 해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연습(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에 중국을 초청하였고, 2018년에는 중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호주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소다자 안보협력도 추동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비전통안보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군사훈련을 제안할 수도 있다. 만약 호주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참여하지 않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이 증진되어야만, 미호동맹을 위시한 미국 주도 동맹의 지역차원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도 더욱 용이하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한미동맹으로의 함의

정구연(통일연구원)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1.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외정책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지역별, 혹은 현안별로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 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인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수행해온 대외정책의 전략적 목표와 대외정책 내부의 일관성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의 외교정책 공약이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스펙트럼 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 혹은 위치시킬 수 있는가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주의자(nationalist)로, 혹은 대중영합주의자로 규정하곤 했으나, 대외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제기된 이념적 특징은 바로 고립주의(isolationist)인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기간과 취임 이후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고립주의라는 한편에 치우친 대외정책 기조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외정책적 행동주의(activism)와 고립주의라는 양 극단의 정향이 동시에 대외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sup>117)</sup>

이는 사실상 2016년 미국 유권자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분석되고 있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대외정책보다는 국내현안에 대통령 후보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 동시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the only superpower)로 건재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sup>118)</sup> 이에 따라 트럼프

---

<sup>117)</sup> Stephen Sestanovich, "The Brilliant Incoherence of Trump's Foreign Policy," *The Atlantic*, May 2017.

<sup>118)</sup> Pew Research Center, "Public Uncertain, Divided over America's Place in the

대통령이 식별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은 단순히 미국이 과도한 비용을 치러야했던 개입주의 대외공약(over-commitment)과 미국의 '자유국 제주의 질서에 대한 리더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도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관계나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며, 해외 개입을 통해 오히려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동시에 미국의 군사력이 소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정학의 귀환 논란과 함께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과도한 비용을 치른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속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기조로 우선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역외균형론과 같은 고립주의로의 단선적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승리하는 방식'으로서의 강력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는 일방주의적 정향이 가중되는, 즉 대외정책적 행동주의와 축소(retrenchment)가 결합된 일방적 축소(unilateral retrenchment)로의 대외정책 형성이 예측된다.<sup>119)</sup>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유지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며, 리더십의 유지보다는 미국의 우위(dominance)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H. R. McMaster)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의 의미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며 동시에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존 오바마

---

World: Growing Support for Increased Defense Spending,” (May 5, 2016).  
<sup>119)</sup> 정구연, “트럼프 대외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pp. 25~49.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좀 더 기여해야한다는 점을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욱 가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다.<sup>120)</sup>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재균형 정책(rebalancing) 혹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은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폐기되면서<sup>121)</sup>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재보장(reassurance) 차원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보여준 상반된 모습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약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겨놓은 것도 사실이다.<sup>122)</sup> 다만 지역적 공약과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래주의(transactionalism)에 기반한 동맹국들의 더 많은 기여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여러 동맹체제에 대한 비용 재조정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안보분담 비용에 따라 동맹국들에 대한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의향을 내비친 것도 사실이다.<sup>123)</sup> 선거기간에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핵무장론까지 거론했으며, 동맹국 내 주둔하는 미군 철수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신의 언급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

---

<sup>120)</sup> H.R. McMaster and Gary D. Cohn, "America First Doesn't Mean America Alone,"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0, 2017.

<sup>121)</sup> Ankit Panda, "Straight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The Pivot to Asia is Over," *The Diplomat*, March 14, 2017.

<sup>122)</sup> Prashanth Parameswaran, "What Mattis' Shangri-la Dialogue Speech Revealed about Trump's Asia Policy," *The Diplomat*, June 6, 2017.

<sup>123)</sup> H.R. McMaster and Gary D. Cohn, "America First Doesn't Mean America Alone."

는, 즉 미국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는 ‘양자적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미국의 거래주의적 입장이 역량기반 군사전략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부담공유 요구로 나타날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한미 간 논의를 통해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은 1) 축소(retrenchment) 국면에 놓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식별하는 아태지역 내 안보위협 의 양상과 범위는 오바마 행정부의 그것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이러한 안보위협들 가운데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안보위협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안보부담공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3) 안보부담공유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어떠한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할 것인가? 최소한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진화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바로 한국의 대외정책적 국가이익에 대한 현실주의적 재확인일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대아시아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정부와 1.5트랙 수준에서 끊임없는 한미 간의 의견교환과 한국의 입장 전달이 필요할 것이다.

## 2. 한미동맹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망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여타 미국 동맹체제와 마찬가지로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점에 서있다. 물론 이미 한미 양국은 여러 글로벌 안보 현안들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외의 공간에서 협력을 시작했으나, 여타 미국 동맹들에 비해 진화 속도와 협력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물론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위협 의 양상, 그리고 대외정책적 이익의 분포에 따라 글로벌 파트

너십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가 수행한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진화과정은 많은 함의를 찾아낼 수 있었다. 미일동맹의 사례에서는 우선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갖는 전략적 이익, 즉 일본의 역내 역할 증대를 통해 동북아 지역과 보다 넓게는 아태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보수성향의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국내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일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안보부담공유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트너십화를 위한 미일동맹의 일체화를 감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호동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호동맹 역시 지역화 및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호동맹의 글로벌화가 가능했던 주요 변수는 구조적인 것으로, 역내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안보위협과 호주가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법치 등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이다. 다만 호주가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동맹체제를 봉쇄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자협력을 통한 해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연구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맹국이 갖고 있는 지역전략이라는 점이다. 즉 동맹국이 처한 지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체제가 여전히 북한문제를 우선순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로,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내정치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국군이 역내

안보임무수행의 영역을 벗어나 역외 임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 역시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해당 동맹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부시 행정부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동맹의 결정을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해외개입주의에 대한 여론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한국이 상정할 수 있는 해외 전략적 이익에 대한 식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역할 분담과 자원공유의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미동맹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안보부담공유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견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비대칭동맹에서 좀 더 동등한 파트너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길승흠 외. 『21세기 일본의 위상』. 서울: 법문사, 1993.
-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출판, 2006.
- 이기완 외. 『동맹의 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매봉, 2005.
- 이기태·김두승.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정철호. 『美·日의 對中 동맹전략 전망과 한국의 안보: 중, 일 간 안보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15.
- 차영구.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09.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년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 Alagappa, Muthiah edit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Australia Department of Defence. *Australian Defence*.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76.
- \_\_\_\_\_. *Defence White Paper 1994*.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4.
- Carpenter, Ted Galen. *Beyond NATO: Staying Out of Europe's Wars*.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1994.
- Green, Michael J.,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Washington D.C.: CSIS, 2014.
- Haftendon, Helga, Robert O. Keohane, and Celeste Wallander eds. *Imperfect Union: Security Institutions over Time and Sp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ICAS). *Report on the Military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Asia-Pacific*

- Region*. Washington D.C.: ICAS, 2016.
- Kostro, Stephanie Snok and Rhy McCormick.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Federated Defense*. Washington D.C.: CSIS, 2015.
- Liska, George.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2.
- Mandelbaum, Michael. *The Dawn of Peace in Europe*. Washington D.C.: Twentieth Century Foundation, 1996.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Paper*.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February 2006.
- \_\_\_\_\_. *Report on Allied Commitment to Defense Spending*. Washington D.C.: DOD, 1981.
- U.S.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March 2006.
- White, Hugh. *The China choice: Why we should share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2. 논문

- 고선규.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향후 전망.” 『독도연구』, 제16호, 2014.
- 김두승.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1권, 2016.
- \_\_\_\_\_.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6권, 2013.
- 김승현. “아베정권의 안보정책 변화와 의의: 평화안전법제 논의를 사례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0호, 2015.
-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와 사회』, 제99호, 2013.
- 남기정.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에 대한 재검토: “없는 메이지국가” 구상과 미일동맹의 현실.” 『일본연구논총』, 제37호, 2014.

- 박충석. “미점령기의 정치개혁.” 현대일본연구회 편. 『일본정치론』. 서울: 박영사, 1983.
- 송영선.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과 주변사태법.” 『국방과 기술』. 제246호, 1999.
- 송화섭. “미일동맹의 변혁과 보통동맹화.” 『국방정책연구』. 제71호, 2006.
- 신정화. “對中 중국 겨냥 ‘위협대응형 방위정책’ 채택.” 『통일한국』. 제345호, 2012.
- 윤덕민·박철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조정과정 비교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2, 2007.
- 이기완.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 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3권 제1호, 2010.
- 이우태·김동수.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동서연구』. 제26권 3호, 2014.
-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2호, 2015.
- 정구연. “트럼프 대외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 최운도. “미일관계와 일본의 국가전략: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일본연구논총』. 제44호, 2016.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美·日 글로벌 파트너십 東京선언(1992.1).” 『국방과 기술』. 1992.
- Akutsu, Hiroyasu. “The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and the US Allianc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Toward Synchronisation.” In *China's Power and Asian Security*. edited by Li Mingjiang and Kalyan M. Kemburi. Abingdon, UK: Routledge, 2015.
- Alastair, Johnston. “Treat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Security Environ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4. 2001.
- Ball, Demond. “The Strategic Esse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5, no. 2. 2001.
- Barany, Zoltab and Robert Rauchhaus. “Explaining NATO's Resilience: 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Useful?.”

-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32, no. 2. 2011.
- Brenchley, Fred. "The Howard Defence Doctrine." *The Bulletin*. no. 117. September 28, 1999.
- Brown, Michael. "The Flawed Logic of NATO Expansion." *Survival*. vol. 37, no. 1. 1995.
- Carter, Ash. "The Rebalance and Asia-Pacific Security: Building a Principled Security Network."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16.
- Gheciu, Alexandra. "Security Institutions as Agents of Socialization? NATO and the New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9, no. 4. 2005.
- Gibler, Douglas and Toby Rider. "Prior Commitment: Compatible Interests versus Capabilities In Alliance Behavior."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0, no. 4. 2004.
- Glaser, John. "The Case Against US Overseas Military Bases: Why they are no longer a strategic asset." *Foreign Affairs*. July 25, 2017.
- Kih, Jihyun and Jaechun Kim. "The Capability-Based Analysis of Alliance Transformation in the Asia-Pacific: Focusing on the ROK-US and US-Philippines Alliance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4, no. 3. 2016.
- Kim, Hyun-Wook. "Substantiating the Cohesion of the Post-Cold War US-Japan Allia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5, no. 3. 2011.
- Koremenos, Barbara, Charles Lipson and Duncan Snidal. "The Rational Desig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4. 2001
- Layne, Christopher. "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 1993.
- Long, Andrew, Timothy Norstrom and Kyeonghi Baek. "Allying for Peace: Treaty Obligations and Conflict between Allies."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2007.
- Mak, J. N. "Malaysian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Coming

- out of the Closet.” In *Asia-Pacific Security Cooperation: National Interests and Regional Order*. edited by See Seng Tan and Amitav Acharya. New York: Armonk, 2014.
- McDevitt, Michael. “The 2006 Quadrennial defense Review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there an American Strategic Vision for East Asia?.” *Issues & Insight*. vol. 7, no. 1. 2007.
- Moravcsik, Andrew.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51, no. 4. 1997.
- Morgan, T. Clift and Glenn Palmer. “To Protect and To serve: Alliance and Foreign Policy Portfoli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2. 2003.
- Morrow, James D.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 Nye, Joseph S.. “Japan's Self Defense Defense.” *Project Syndicate*. Augst 6, 2014.
- Ohtomo, Tkafumi. “Bandwagoning to Dampen Suspicion: NATO and the US-Japan Allianc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3, no. 1. 2003.
- Park, Jae Jeok.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Bilateral for Minilateral?.” *Pacific Focus*. vol. 31, no. 2. 2016.
- \_\_\_\_\_. “The persistence of the US-led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an order insurance explan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3, no. 3. 2013.
- Park, Min-hyung and Chun, Kwangho. “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 2015.
- Pollack, Jonathan. “Order at Risk: Japan,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Paradox.” *Asia Working Group Paper 5*, September 2016.
- Riss-Kappen, Thomas. “Collective Identity in a Democratic

- Community: The Case of NATO.”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ited by. Peter Katz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Schweller, Randa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 Sestanovich, Stephen. “The Brilliant Incoherence of Trump’s Foreign Policy.” *The Atlantic*. May 2017 Issue.
- Wallender, Celeste. “Institutional Assets and Adaptability: NATO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54, no. 4. 2000.
- Walt, Stephen.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 Waltz, Kenneth. “NATO’s Expansion: A Realist’s View.” in *Explaining NATO Enlargement*. edited by Robert Rauchhaus. London: Franc Cass, 2001.
- \_\_\_\_\_. “Realist Thoughts and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1990.
- \_\_\_\_\_.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1. 1993.
- Warren, T. Camber. “The Geometry of Security: Modeling Interstate Alliances as Evolving Network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 2010.

### 3. 기타

- 『경향신문』.
- 『뉴시스』.
- 『문화일보』.
- 『브릿지경제』.
- 『아시아경제』.
- 『연합뉴스』.
- 『주간동아』.

『한겨레』.

『한국일보』.

*Financial Times.*

*The Australian.*

*The Diplomat.*

*The New York Times.*

*The Sydney Morning Herald.*

*The Wall Street Journal.*

VOA.

미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

미국 국방부 <<http://defense.gov>>.

일본 방위성 <<http://www.mod.go.jp>>.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

호주 국방부 <<http://www.defence.gov.au>>.

호주 외교부 <<http://dfat.gov.au/>>.

Databank <<http://databank.worldbank.org>>.

Global Balita <<http://globalbalita.com>>

Lowy Institute <<https://www.lowyinstitute.org>>.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https://www.sipri.org>>.

World Socialist Web Site <[www.wsws.org](http://www.wsws.org)>.

유엔 현장.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 Report of the CSIS Japan Chair. August, 2012.

Indo-Asia-Pacific Defense Forum. “Australia to Aid Philippines in Marawi Terror Battle.” September 23, 2017.

INSS Special Repor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uture Partnership.” 2000.

Pew Research Center. “Public Uncertain, Divided over America's Place in the World: Growing Support for Increased Defense

Spending.” May 5, 2016.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The United States Military’s Contribution to National Security.” June 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_\_\_\_\_ .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2001.

\_\_\_\_\_.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5.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at Sophia University, Secretary Condoleezza Rice.” March 19, 2005.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마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 연구보고서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선,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주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현승수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 기 타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